

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유형분석 및 협업모델 신규 발굴



지방자치단체 협업행정 유형분석 및 협업모델 신규 발굴



연구진

이재용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대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엄영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객원연구원

□ 연구배경

- 행정수요의 복잡화, 다양화에 따른 대안 마련 필요
 - 최근의 행정수요는 복잡한 사회적 난제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단독 주체가 감당하는 것은 어려움
 - 사회적 난제는 문제의 범위 또는 속성 등이 하나의 조직 또는 기관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다양한 주체들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함
- 공공, 민간분야 주체 간 업무협력의 필요성 대두
 -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시대에 필요한 지자체의 역량 강화 필요
 - 협업행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지자체의 역량 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 수행
- 지자체의 협업행정은 여러 주체들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는 각종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

□ 연구의 필요성

- 최근 행정현장에서의 민관협력 및 공공부문에의 민간참여가 중요해짐에 따라, 협업행정의 명확한 개념정립 필요
 - 협업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및 관련 활동을 포함하는 넓은 범위의 활동을 가리킴
 - 협업행정은 복수의 주체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결과를 얻고자하는 행위를 의미함
- 선행 협업행정 사례들의 서비스 분야 및 속성 등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협업행정 유형 제시 필요

- 선행연구는 협업의 주체, 내용 및 효과를 고려한 유형화를 시도하였으나 행정현장의 환경을 반영하지 못함
- 서비스 분야, 내용, 속성, 기대효과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협업행정의 유형 제시는 지자체 차원에서의 우수한 협업행정 사례 기획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 협업행정의 개념

- 협업행정의 참여주체 범위에 대한 이론(異論) 존재
 - 공공분야 주체에 한정: 민간을 제외한 공공분야의 부서, 기관들의 상호작용으로 그 범위를 제한
 - 공공, 민간분야 주체 포함: 민간이 참여한 협력방식을 협업행정의 일환으로 포함
- 최근 행정현장을 고려할 때 공공, 민간분야 주체를 포함하는 것이 적절
 - 협업행정과 민관협력 간 경계 구분의 실익이 없음
 - 민관협력의 강조 및 정책에의 민간참여 활성화로 인해 협업행정의 주체에 중앙정부, 기관, 지자체 이외의 민간이 포함됨
- 협업행정은 공공분야의 주체 간 또는 공공 및 민간주체 간 인력, 자원, 전문지식 공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 사례분석 및 결과

- 협업행정의 유형화를 위해 관련 우수사례를 분석하고 각각의 사례의 특징, 문제점 및 성공요인 등을 도출함
- 분석대상
 - 분석대상 모집단: 2017년~2019년까지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협업 및 민관협력 관련 공모 사례 629개
 - 분석대상 사례선정: 최초 629개 사례 각각의 참여주체를 파악하고, 이 중

중앙-민간, 지자체 단독 추진 협업을 제외한 601개를 우선 선정(1차 분석)
 → 601개 중 자원공유, 지속가능성을 충족하는 73개 사례를 선정(2차 분석)
 → 참여주체, 서비스 분야, 과학기술 적용여부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한 최종분석 대상 23개를 확정함

○ 분석결과

- 참여 주체를 한정하지 않고 공공과 민간분야의 다양한 주체를 고려하여 협업행정의 범위를 이해할 필요가 있음
- 협업행정은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으며, 지자체의 현안, 목표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이 가능함
- 과학기술의 적용 여부는 협업행정의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특정 협업을 가능하게 하거나 해당 행정서비스의 질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대부분의 사례의 정책대상은 외부 수요자이지만, 특정 사례는 내부고객을 정책대상으로 하여 행정프로세스 개선을 추구하기도 함
- 협업행정의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간 예산, 인력, 정보 등의 자원 공유가 필요함
- 협업의 지속적인 성과창출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마련(예. 조례 제/개정), 운영기관 설립(예. 협동조합, 법인),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등이 필요함

□ 신규협업모델

-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한 신규 협업행정 유형은 사회혁신 협업모델과 행정혁신협업모델이며, 관련 내용은 아래 표와 같음

		유형	
		사회혁신 협업모델	행정혁신 협업모델
특징	정책대상	시민(외부고객)	공공주체 자신(내부고객)
	참여주체	공공+민간	공공
	기간	중장기	단기
	서비스분야	제한없음	
		※ 외부의 전문기술·지식활용 관련 분야 적합	※ 민원서비스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 관련 분야 적합
협업 시 고려사항	속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 모두 적합	
		-	※ 소프트웨어가 주
	자원공유	민관 협업 시 상대방을 대등한 주체로 인식 필요	공공주체 간 위계관계 해소 필요
	과학기술 적용/가능성	민간으로부터 기술 차용	민간으로부터 기술 차용 또는 독자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인력 확보, 조합 등 기관 설립, 조례 정비 등	전담부서/인력 확보, 행정협의회 등 기구 설립 등
하위유형		환경개선형, 사회복지형, 일자리 창출형	Process개선형, Service확대형 또는 정보공유형, 자원통합형

□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

○ 행정안전부 차원

- (정책제언1-협업행정 개념 정립 필요) 행정주체와 협업행정 관련 실무자들의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위한 가이드라인 또는 교육 제공 필요
- (정책제언2-협업행정 확산에 필요한 기반 구축) 협업행정 관련 우수사례의 발굴 및 해당 사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
- (정책제언3-협력 중재자 또는 조정자 역할 수행)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체 간 갈등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 역할 필요

○ 지방자치단체 차원

- (정책제언1-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 협업행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 자치조례의 제·개정,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등 필요
- (정책제언2-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단체 설립)협업행정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합, 법인 등 단체 설립 필요
 - (정책제언3-협업 플랫폼/시스템 구축) 정보기술 기반의 융합형 플랫폼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협업행정의 효율성 확보 필요

CONTENT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ocal Administration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3
1. 연구 배경	3
2. 본 연구의 필요성	4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6
1. 연구 목적	6
2. 연구 내용 및 방법	6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9
제1절 협업행정의 개념 정립	11
1. 협업행정의 정의	11
제2절 협업행정 유형화의 필요성	13
1. 협업행정 유형 관련 선행연구	13
2. 협업행정 유형 및 유형별 사례 연구의 필요성	14
제3절 사례분석틀 개발	16
제3장 협업행정 사례 및 유형분석	21
제1절 분석절차 및 사례개괄	23
제2절 사례분석 결과	27
1. 서울 서대문구 사례(학교 밖 배움터 달팽이학교)	27
2. 부산 사하구 사례(감천동 빈집재생 사업)	30
3. 경상남도 사례(행복모꼬지)	33
4. 광주 광산구 사례(병원아동보호사)	36
5. 충남 아산시 사례(고령 아파트 경비원)	39

6. 경기도 사례(소방차 출동정보 119신고자와 실시간 공유·협업)	42
7. 인천 미추홀구 사례(빈집은행 프로젝트)	45
8. 대전 대덕구 사례(중소기업단)	48
9. 세종특별자치시 사례(세종교통사관학교)	50
10. 경북 안동시 사례(생태계 교란종 지역 상품화)	54
11. 충청남도 사례(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	56
12. 서울 강남구 사례(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협약 체결)	59
13.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례(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완등자 인증)	61
14. 경기 안양시 사례(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62
15. 충북 진천군 사례(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64
16. 인천광역시 사례(광역행정의 게임체인저)	67
17. 서울 동대문구 사례(청년취업 'All-In-One프로젝트')	69
18. 부산광역시 사례(용두산공원, 랜드마크 관광지로 재도약)	72
19. 경북 구미시 사례(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74
20. 광주 북구 사례(금융·고용·복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77
21. 서울 영등포구 사례(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구축)	79
22. 전라남도 사례(100원 택시)	82
23. 대구광역시 사례(자동화기술 기반 3차원 지도 구축)	84
제3절 소결론	87
제4장 협업유형 제시	91
제1절 신규 협업유형 개발 배경	93
제2절 신규 협업유형 제시	94
제5장 결론 및 제언	109

CONTENTS

제1절 분석결과 종합	111
제2절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113
【참고문헌】	117
【부록】 2차 사례분석 결과	119

표목차

[표 2-1]	참여주체에 따른 협업행정 공모 사례 분류 결과	12
[표 2-2]	협업행정 사례의 속성 및 행정서비스 분야 빈도분석 결과	17
[표 2-3]	협업행정 사례의 과학기술 적용 여부 빈도분석 결과	18
[표 2-4]	협업행정 사례분석 틀	20
[표 3-1]	1차 분석 결과: 참여주체 고려	24
[표 3-2]	2차 분석 결과: 자원공유, 지속가능성 충족 사례	24
[표 3-3]	분석대상 사례 리스트	25
[표 3-4]	사례1: 서울 서대문구(달팽이학교)	29
[표 3-5]	사례2: 부산 사하구(감천동 빈집재생사업)	32
[표 3-6]	사례3: 경상남도(행복모꼬지)	35
[표 3-7]	사례4: 광주 광산구(병원아동보호사)	39
[표 3-8]	사례5: 충남 아산시(고령 아파트경비원)	41
[표 3-9]	사례6: 경기도(소방출동정보 실시간 공유)	44
[표 3-10]	사례7: 인천 미추홀구(빈집은행 프로젝트)	47
[표 3-11]	사례8: 대전 대덕구(중소기업지원단 운영)	50
[표 3-12]	사례9: 세종특별자치시(세종교통사관학교)	53
[표 3-13]	사례10: 경북 안동시(생태계 교란종 지역상품화)	56
[표 3-14]	사례11: 충청남도(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58
[표 3-15]	사례12: 서울 강남구(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협약)	60
[표 3-16]	사례13: 울산 울주군(영남알프스 봉우리 완등 인증)	62
[표 3-17]	사례14: 경기 안양시(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64
[표 3-18]	사례15: 충북 진천군(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66
[표 3-19]	사례16: 인천광역시(광역행정의 게임체인저)	68
[표 3-20]	사례17: 서울 동대문구(청년취업 'All-In-One프로젝트')	71
[표 3-21]	사례18: 부산광역시(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	73
[표 3-22]	사례19: 경북 구미시(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76

CONTENTS

[표 3-23] 사례20: 광주 복구(금융·고용·복지 통합서비스)	78
[표 3-24] 사례21: 서울 영등포구(여성안심 빅데이터 플랫폼)	81
[표 3-25] 사례22: 전라남도(100원 택시)	83
[표 3-26] 사례23: 대구광역시(자동화기술 기반 3차원 지도)	86
[표 4-1] 개발된 신규 협업행정 유형	94
[표 5-1] 협업행정 가이드라인 구성 예시	114
[표 5-2] 협업행정 갈등조정위원회 예시	115

그림목차	[그림 1-1] 연구 체계도	7
	[그림 5-1] ICT 기반 협업행정 플랫폼 내용 및 기대효과	11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제1장

서론

KRILA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1. 연구 배경

□ 협업행정의 중요성

- 저출산에 따른 인구의 고령화, 사회의 양극화에 의한 경제 문제 대두, 비약적 기술발전 및 정보화 등에 따라 국민의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음
- 이와 같은 다양한 행정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실질적 현안 파악 및 정책적 차원에서의 새롭고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전술한 행정수요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파생된 복잡한 사회적 난제(wicked problems)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특정 부처 또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며¹⁾, 이에 따라 기관, 부처 및 지자체 간 업무협력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하고 있는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따라 지자체의 역량 강화가 필요한 현 시점에서, 지자체 간 협업행정은 단기간에 성과를 내기 어려운 각각의 지자체의 역량 강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함
- 또한 지자체 간 협업행정은 지역별 하드웨어적 측면에서의 시설 및 설비 편차,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의 서비스 편중 문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

1) 사회적 난제는 해당 문제의 범위 또는 속성 등이 하나의 조직 또는 기관에 국한된 것으로 보기 모호하여 다양한 주체들의 자원과 노력이 필요함(Rhodes, 2000)

2. 본 연구의 필요성

□ 협업행정 개념 정립, 유형분석 및 신규유형 제시의 필요성

- 협업행정(collaborative public administration)은 협업(collaboration)의 범위를 축소시킨 개념으로, 복수의 주체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행정자원을 활용하여 특정 결과를 얻고자하는 행위를 의미함
 - 협업은 특정 목표의 달성을 위해 여러 부문의 다중행위자 간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협력행위를 의미함(Poocharoen & Ting, 2015)
 - 협업은 다양한 형태의 협력 및 그와 관련된 참여활동을 포괄하는 넓은 범위의 용어(umbrella term)이며(이재용·김지수·엄영호, 2019), 특정 결과를 창출하지만 행정서비스 이외의 민간서비스를 생산하는 것도 포함함(Bovaird & Loeffler, 2015)
 - 협업행정은 민간부문의 행위까지 아우르는 협업의 넓은 개념을 축소하여, 대상 범위를 공공분야의 행위 및 결과로 한정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하지만 최근 행정현장에서의 민관협력 및 공공부문에의 민간참여 등이 중요해짐에 따라, 협업에서 시작된 단순한 차원에서의 협업행정의 이해보다는 실무적 차원에서의 협업행정의 명확한 개념 정립이 필요한 실정임
- 또한 행정안전부는 협업 우수사례 및 특교세 지원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해당 사례 구분에 필요한 기준 및 명확한 협업 유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우수 사례를 발굴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 협업우수사례 공모는 2018년, 2019년도에 실시되었으며, 2018년에는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2019년의 경우 「협업 우수사례」를 각각 선정하였지만, 명확한 협업의 기준 또는 유형 등을 제시하지 못하였음
 - 특교세가 지원된 공모는 2019년도에 실시되었으며,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을 선정하여 기존의 협업우수사례 공모에 비해서는 구체적인 유형을 제시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모의 대상이 하드웨어 사업에 집중되었음
- 지자체 차원에서 우수한 협업 사례를 발굴 및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협업행

정의 명확한 개념 정립과 함께, 선행 협업사례에 대한 유형 분석 및 특정 하드웨어 사업에 한정되지 않고 넓은 분야의 행정서비스를 포함할 수 있는 새로운 협업 유형의 제시가 필요함

- 본 연구는 이론적·실무적 차원에서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음의 구체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고자 함
 - 첫째, 협업행정의 명확한 개념 및 범위는 무엇인가?
 - 둘째, 사례 분석을 통한 지자체 간 협업행정의 유형화는 가능한가?
 - 셋째,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고려한 협업행정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넷째, 협업행정의 추진 및 성과창출을 위한 중앙정부 및 지자체 차원의 지원방안은 무엇인가?
 - 이를 통해 행정서비스 공동생산의 이해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학문적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제2절 연구목적 및 방법

1. 연구 목적

연구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행정의 유형분석을 바탕으로 새로운 협업유형 제시 및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는 것임

2. 연구 내용 및 방법

연구의 개요

- 본 연구는 ① 협업행정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한 이론적 논의, ② 분석대상범위 및 분석틀 제시, ③ 국내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행정의 유형분석, ④ 협업모델 신규 발굴, ⑤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제언의 5가지로 구성됨

연구의 방법

- 자료수집 및 분석은 문헌연구와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행정 관련 국내 사례 분석 및 제언의 도출은 다중사례비교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진행함

연구의 내용

- 본 연구의 각 장별 내용을 포괄하는 연구의 체계를 [그림 1-1]과 같이 제시함

[그림 1-1] 연구 체계도

순서	연구내용	방법
제1장 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배경 및 필요성 연구목적 및 방법 연구 흐름도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협업행정의 개념 정립 협업행정 유형 관련 선행연구 고찰 분석대상범위 및 분석틀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제3장 협업행정 유형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분석: 협업 공모 사례, 특교세 지원 공모 사례, 지자체 혁신평가 사례, 공동생산 공모 사례 사업 속성, 주체 등을 고려한 유형분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4장 협업유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례분석 및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자체 간 협업유형 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제5장 결론 및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석결과 종합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헌연구 전문가자문

□ 분석대상범위 및 분석틀

- 협업행정의 개념 정립 및 유형 제시를 위해 국내·외 문헌 및 연구자료를 활용함
 - 행정학 분야의 협업 관련 연구자료를 기반으로 하며, 유사개념과의 차이점을 구분하기 위해 협업 이외의 민간참여활동 관련 문헌검토도 병행함
-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행정의 유형분석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짐
 - 유형분석은 2018년, 2019년도 행정안전부 주관 공모전 출품 사례, 2019년도 행정안전부 협업정책과 주관 특교세 지원 공모 사례, 2019년도 지자

체 혁신평가 사례, 그리고 2017~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동생산 공모 사례 등을 대상으로 함

- 분석결과 및 문헌검토를 바탕으로 지자체 간 협업유형을 제시함
-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를 정리하고, 지자체 간 협업행정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수준에서 각각 기술함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제1절 협업행정의 개념 정립

제2절 협업행정 유형화의 필요성

제3절 사례분석틀 개발

제2장 이론적 논의 및 분석틀

KRILA

제1절 협업행정의 개념 정립

1. 협업행정의 정의

- 협업행정은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주체가 협력을 통해 특정 목표를 달성하는 방식을 의미하지만, 해당 주체의 범위에 대해서는 다른 의견이 존재함
- 다수의 선행연구 및 행정 현장에서의 인식을 통해 볼 때, 협업행정은 전통적인 관점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분야(public sector)의 부서, 기관 등의 상호작용으로 그 범위를 제한하고 있음(예. Shergold, 2008; Kagan, 1991; Gray, 1989; 김윤권, 2014; 행정자치부, 2013)
- 하지만 민간 주체의 참여를 무조건적·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협업과정에서의 민간의 역할 및 민관협업의 방식 등을 고려하여 협업행정의 범위에 민간참여를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함
- 특히 최근 행정현장에서의 민관협력이 강조됨에 따라 정책에의 민간참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협업행정의 주체에 정부, 기관, 지자체 이외의 민간이 포함되는 경우가 발생하여 협업행정과 민관협력 간 경계를 나누는 것은 시의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실제로 보다 넓은 관점에서 협업행정을 “자율적인 정부 부처 간, 중앙과 지방 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에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금창호, 2013) 또는 공공분야의 주도로 공공 및 민간 조직 간의 자율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공공가치를 실현하는 문제해결방식(이명석·배재현·양세진, 2009; 양세진, 2013) 등으로 이해하기도 함
 - 또한 행정현장에서도 민간이 참여한 협력방식을 협업행정의 일환으로 포

함시키는 경우가 있음

- [표 2-1]은 2018년, 2019년도 협업행정 우수사례 공모전에 출품된 사례들의 참여주체를 분석한 것으로, 전체 사례 중 민간이 참여한 경우가 공공 부문 주체들이 참여한 방식보다 많은 것이 확인되었음

[표 2-1] 참여주체에 따른 협업행정 공모 사례 분류 결과

구분		2018년 사례 수(%)	2019년 사례 수(%)	계
참여	공공부문	5(12.2)	10(33.3)	15
	민간참여	36(87.8)	20(66.7)	56
합계		41(100)	30(100)	71

자료: 2018, 2019년도 협업행정 우수사례 공모전 참여 사업을 연구자가 분석

주: 공공부문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을 포함함

2018년, 2019년도 공모전은 각각 전년도 사례인 2017년, 2018년 사례를 심사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다수의 이론적 논의 및 실무적 상황을 고려하여, 협업행정을 공공분야의 주체 간 또는 공공 및 민간주체 간 인력, 자원, 전문지식 공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으로 정의함

제2절 협업행정 유형화의 필요성

1. 협업행정 유형 관련 선행연구

- 협업행정의 유형 구분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데, 학술적 차원보다는 주로 행정현장에서의 요구와 필요에 의해서 진행되었으며(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해당연구에서 협업행정의 유형은 주체, 내용, 협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구분되었음
- 주체에 따른 분류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만을 협업행정의 개별 주체로 보고, 각각의 주체들 간 조합에 따른 3가지 유형의 협업으로 이해할 수 있음(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 즉 중앙부처 간, 중앙부처-지자체 간, 그리고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간 예산, 인적자원, 서비스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을 공유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 내용에 따른 분류는 활용자원 또는 사업목적 등 협업행정의 속성을 고려하여 협업행정을 유형화한 것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 자원 공동 활용형: 주체들이 협업행정에 필요한 예산, 인적자원,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을 공유하여 상호 협력하는 유형으로서, 성과 창출 및 협업 추진 등이 용이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 윈스톱서비스 제공형: 행정서비스의 수요자를 고려하여 서비스의 이용 편의 및 전달 능력 향상에 중점을 둔 유형으로서, 일반적으로 수요자인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 기관 간 정책협력형: 기관 간 협력을 통해 협업과정에서 필요한 자원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특정 정책을 추진하는 유형을 가리킴(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 협업효과에 따른 분류는 협업을 통해 도출된 성과와 관련된 대상을 고려하여 협업행정을 유형화한 것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 즉 협업의 효과를 체감하는 대상이 시민일 경우, 협업의 효과가 협업에 참여한 주체들에게 미치는 경우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서비스 만족도 제고형: 협업행정의 결과 행정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을 통해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는 유형을 가리킴(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 내부효율성 제고형: 협업행정의 결과가 예산 절감, 업무처리 시간 단축 등 업무수행과정의 개선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유형임(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장민선·권채리, 2015)
- 하지만 해당 분류들은 실무적 필요에 의한 시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 논의에 가깝고 행정현장에 적용하기에는 실익이 불분명한 한계가 있음
 - 전술한 내용 중 주체에 따른 분류는 참여주체를, 협업효과에 따른 분류는 협업의 수혜 대상을 각각 고려한 것으로서 협업의 내용 또는 속성은 고려하지 않았음
 - 내용에 따른 분류는 사업의 목적·내용 등을 고려했다고는 하지만, 제시한 유형 중 ‘자원 공동 활용형’과 ‘기관 간 정책협력형’의 경계 및 내용이 명확하게 구별되지 못하고 있음

2. 협업행정 유형 및 유형별 사례 연구의 필요성

- 전술한 바와 같이 협업행정의 유형 분류는 소수의 연구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협업의 주체, 내용 및 효과를 고려한 유형화 시도는 있었지만 행정현장의 환경을 충실히 반영하지 못하였음
- 협업행정의 유형 분류 및 개발의 미진함은 행정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와 관련한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됨

- 행정안전부가 주관하여 진행한 2018년, 2019년도 협업우수사례 공모에서는 ‘협업 추진 및 협업문화 조성 분야’, ‘업무방식의 효율화 및 업무 프로세스 개선 분야’, ‘협업활성화 및 협업문화 조성 분야’, ‘사회적가치사업 협업 우수사례 분야’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였지만, ‘업무방식의 효율화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분야’를 제외한 나머지 분야 간 차이점을 파악하기 어렵고, 해당 분야들을 구분한 기준 또는 속성 등이 명확하지 않음
- 2019년에 진행된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전은 하드웨어 사업에 중점을 둔 사례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보다 넓은 관점에서 협업행정 사례를 발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음
- 또한 협업행정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보다 실용적인 관점에서 현장의 상황을 반영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함
- 2019년도에는 총 20억의 특별교부세를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사업 공모에 선정된 7개 지자체에게 지원하였으며, 향후 지자체 간 협업 추진을 위한 특교세 지원이 확대될 예정임
- 우수한 지자체 간 협업행정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협업의 분야, 내용, 속성, 기대효과 등을 고려한 다양한 협업행정 유형을 제시하여, 지자체가 해당 유형을 이해하고 그에 맞는 사례를 기획 및 발전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지자체 간 선행 협업행정 사례들의 서비스 분야 및 속성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현장에서 필요한 협업행정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필요함

제3절 사례분석틀 개발

□ 사례분석틀 개발 및 제시

- 본 연구는 제1절 및 제2절의 논의를 바탕으로 2018년, 2019년에 진행된 행정안전부 주관 협업행정 공모 사례, 2019년도 협업정책과 주관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공모 사례, 2019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사례, 그리고 2017~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공동생산 공모 사례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함
 - 분석 결과는 협업행정의 유형을 파악하고, 신규 협업유형 및 협업행정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활용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선행 협업행정사례의 속성, 내용, 서비스 분야 및 실효성을 파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 분석틀의 개발이 필요함
 - [표 2-2]는 2018년, 2019년 협업행정 우수사례 공모 및 2019년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공모전 사례, 2019년 지자체 혁신평가 사례, 2017~2019년 공동생산 사례를 사업의 속성(하드웨어/소프트웨어) 및 행정서비스 분야(교육,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사회복지, 생활/편의,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에 따라 분류한 결과이며, 이를 통해 협업행정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분야에서의 활용가능성을 알 수 있음

[표 2-2] 협업행정 사례의 속성 및 행정서비스 분야 빈도분석 결과

구분		속성		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서비스분야	교육	47	8	55
	마을공동체	13	16	29
	문화/관광	45	33	78
	사회복지	80	17	97
	생활/편의	39	23	62
	안전/치안	64	17	81
	지역개발/환경	79	70	149
	행정관리	50	5	55
	기타	20	3	23
합계		437	192	629

자료: 2018, 2019년도 협업행정 공모, 2019년도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공모 사례, 2019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사례, 2017~2019년도 공동생산 공모 사례를 연구자가 분석

주: 중앙-지자체, 지자체간 또는 민간과의 협업 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진행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한편 주요 과학기술을 활용한 지자체 차원의 행정서비스 개선 시도는 최근의 협업행정을 이해하기 위한 또 다른 관점임
- 현재 소수의 기초지자체가 과학기술을 도입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의 기초지자체에서는 과학기술을 활용하기 위한 인적·재정적 역량이 부족한 상황임
- 협업행정은 이와 같은 과학기술 도입 및 활용과 관련하여 기초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현실적 문제를 개선 및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음
- [표 2-3]는 전체 분석대상 사례 중 과학기술을 적용한 협업행정 사례의 빈도분석 결과이며,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협업행정을 통해 과학기술을 적용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2-3] 협업행정 사례의 과학기술 적용 여부 빈도분석 결과

구분		과학기술 적용		계
		유	무	
서비스분야	교육	6	14	20
	마을공동체	0	2	2
	문화/관광	0	18	18
	사회복지	7	34	41
	생활/편의	6	40	46
	안전/치안	8	12	20
	지역개발/환경	13	19	32
	행정관리	15	63	78
	기타	5	13	18
합계		60	215	275

자료: 2018, 2019년도 협업행정 공모, 2019년도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공모 사례, 2019년도 지자체 혁신평가 사례, 2017~2019년도 공동생산 공모 사례를 연구자가 분석

주: 중앙-지자체, 지자체간 또는 민간과의 협업 없이 지자체 단독으로 진행한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실무적 상황 및 선행연구에서 발췌한 협업행정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 차원의 협업사례를 분석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사례분석틀(분석기준)을 다음 절에서 제시함

○ 본 연구에서는 사례 분석을 위해 해당 사례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구분기준(참여주체, 속성 및 서비스분야, 정책효과 및 대상)과 세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기준(과학기술 적용 및 가능성, 협업 주체 간 자원 공유 여부, 지속가능성)을 사용하였음

- (구분기준 1) 협업행정의 참여주체

- 선행 연구에서는 공공 분야만을 협업행정의 주체로 인식하고 중앙과 지자체로 구분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확장되고 있는 협업행정의 범위를 고려하여 민간 분야를 협업행정의 새로운 주체로 포함하였음
- 민간의 유형은 실제로는 공공분야 주체 대비 다양한 성격으로 인해 일반

- 시민, 전문가, 단체, 대학 등으로 세분화되는 편이지만(예. 이재용·김지수, 2020), 협업행정에서는 민간의 참여 유무가 주요 고려 사항이므로 민간 주체를 세분화하는 것 보다는 단일 유형화하여 접근하는 것이 적절함
- 이와 같이 참여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구분하였을 때, 중앙-중앙, 중앙-지자체, 중앙-민간, 중앙-지자체-민간, 지자체-지자체, 지자체-민간 등의 협업행정으로 구분이 가능함
- (구분기준 2) 속성 및 서비스 분야
- 서비스의 속성은 크게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로 나누며 해당 사례의 주목적에 부합하는 속성으로 구분함
 - 또한 행정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분야를 고려하여 교육,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사회복지, 생활/편의,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등으로 세분화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함
- (구분기준 3) 정책효과 및 대상
- 사례가 지향하는 목표 및 해당 사례의 수혜 대상을 분석하여 또 다른 관점에서 협업행정의 속성을 이해하고자 함
 - 예를 들어, 협업행정의 성과가 민간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일 경우 그 대상은 외부고객(예. 시민)이 되는 반면, 해당 성과가 행정서비스 또는 정책과정에서의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는 것이라면 수혜 대상은 내부고객(예. 공공분야 주체, 지자체)이 됨
- (분석기준 1) 과학기술 적용 여부 및 가능성
- 행정에의 과학기술 도입을 고려하여 각각의 개별 사례에 대한 과학기술의 적용 및 적용 가능성 여부를 분석하고자 함
- (분석기준 2) 자원공유 여부
- 협업행정에 참여하는 각각의 주체들이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의 정도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정 사업의 원활한 진행 및 성과를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주체들 간의 자원 공유를 통한 상호 보완적 관계가 요구됨
 - 협업 과정에서 참여 주체들 간 예산, 인적자원, 관련 정보 및 기술 등을 공유하고 있는가를 파악함

- (분석기준 3) 지속가능성

- 향후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자체 간 협업행정이 활성화될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사업들이 특정 공모사업을 위한 이벤트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본 연구에서는 제도정비(예. 조례 제/개정), 상시조직 설립(예. 협동조합/법인 설치), 협업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인력 운영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해당 사례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가를 분석함

○ 전술한 내용을 종합하여 지자체 간 협업행정 사례 분석틀(분석기준)을 [표 2-4]와 같이 제시함

[표 2-4] 협업행정 사례분석 틀

주제	해당사례의 주제는 무엇인가?	
구분	내용	
주체유형	해당 사례는 지자체-기타, 지자체-중앙, 지자체-민간, 지자체-지자체 유형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참여주체	구체적인 공공, 민간 분야의 참여주체는 누구인가?	
속성	하드웨어 사업인가, 소프트웨어 사업인가?	
서비스 분야	교육,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사회복지, 생활/편의,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중 어느 분야에 해당하는가?	
정책효과	행정서비스의 향상인가,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인가?	
정책대상	외부고객(시민)인가, 내부고객(공공주체 자산)인가?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적용된 과학기술이 있는가? 있다면 해당 과학기술은 무엇인가?	O/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향후 과학기술의 적용이 가능한 사업인가?	O/X
자원공유	참여주체 간 예산, 인력, 정보, 기술 등을 공유하였는가?	O/X
지속가능성	제도정비, 전담부서/인력 확보 등이 이루어졌는가?	O/X

제3장

협업행정 사례 및 유형분석

제1절 분석절차 및 사례개괄

제2절 사례분석 결과

제3절 소결론

제3장

협업행정 사례 및 유형분석

KRILA

제1절 분석절차 및 사례개괄

- 본 연구의 최초 분석대상은 2018년, 2019년 협업행정 우수사례 공모 및 2019년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공모전 사례, 2019년 지자체 혁신평가 사례, 2017~2019년 공동생산 사례이며, 3단계 분석과정을 통해 해당 사례들을 분석하였음
- (1차 분석) 629개의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각각의 사례에 참여한 협업행정의 주체를 분석하였음
 - 제2장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참여 주체를 공공과 민간으로 나눈 후, 공공 분야의 주체는 중앙과 지자체로 세분화하였으며, 공공기관, 대학 등을 포함하는 기타의 범주를 추가하여 다른 주체들과 구분하였음
 - 1차 분석의 결과, 해당 사례들은 참여주체에 따라 중앙-지자체, 중앙-민간, 중앙-지자체-민간, 지자체-지자체, 지자체-민간, 지자체-기타 협업행정 사례 및 지자체 단독 수행 사례로 유형화됨
 - 이 조합들 중 중앙-민간 간 협업사례 4건은 지자체 차원의 협업행정을 다루고 있는 본 연구의 방향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함
 - 단일 지자체가 주체인 사례는 주로 혁신평가 사례에서 도출되었으며, 협업행정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 역시 1차 분석을 통해 제외하였음
 - [표 3-1]은 분석 대상 사례들의 참여주체를 고려하여 진행한 1차 분석의 결과를 나타내는 것임

[표 3-1] 1차 분석 결과: 참여주체 고려

사례유형	주체별 유형분류							계	
	중앙			지자체				전체	②,⑦ 제외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자체	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	민간	기타	단독		
협업행정	-	4	3	14	50	1	-	72	68
공간통합·시설공유	3	-	-	22	2	24	4	55	51
혁신평가	15	-	7	72	32	111	20	257	237
공동생산	3	-	-	7	100	135	-	245	245
계	21	4	10	115	184	271	24	629	601

주: 전체 분석대상 중 중앙-민간, 지자체-단독을 제외한 사례 수는 601개임

- (2차 분석) 1차 분석의 결과 남겨진 601개의 협업행정 관련 사례를 대상으로 본 연구의 특정 분석기준을 만족하는 사례를 선정하였음
 - 분석틀에 제시한 내용 중 구분기준은 해당 사례의 분류를 위한 것이고, 분석기준은 사례의 질적 평가와 관련됨. 2차 분석에서는 심층분석(3차 분석)의 대상이 되는 우수사례를 선별하기 위해, 각각의 개별 사례의 분석기준 충족 여부를 파악하였음
 - 분석기준 중 주체 간 자원공유와 지속가능성은 해당 사례의 질적 평가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요인으로서, 분석 결과 73개의 사례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3-2] 참조. 2차 분석 전체 결과는 본 보고서의 부록에 제시)

[표 3-2] 2차 분석 결과: 자원공유, 지속가능성 충족 사례

구분	주체별 유형분류					계
	중앙		지자체			
	지자체	지자체-민간	지자체	민간	기타	
자원공유, 지속가능성 충족 사례	3	2	10	24	34	73

- (3차 분석) 2차 분석을 통해 선정된 73개 사례들의 주체에 따른 유형, 서비스 분야, 과학기술 적용여부 및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최종분석 대상을 확정하였음
 - 참여 주체 유형별로 각각의 서비스 분야에서 1개 이상의 사례가 선정되도록 하였음
 - 분석기준 중 과학기술 적용의 여부는 해당 사례의 우수성을 직접적으로 평가하는 기준은 될 수 없으나, 혁신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볼 수 있으며, 심층분석 대상의 선정 시 고려 기준이 됨
 - 73개 사례들 중 과학기술 적용 여부의 빈도를 고려하여 과학기술을 적용 또는 미적용한 사례가 최종분석대상에 편향적으로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음. 단 해당 기준이 사례의 혁신성과 관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현재 과학기술이 활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적용 가능성이 있는 사례를 우선적으로 선별하였음
 -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최종분석 대상사례 23개를 [표 3-3]과 같이 제시함

[표 3-3] 분석대상 사례 리스트

주체유형	번호	지자체	사례명
지자체 -기타	1	서울 서대문구	천천히, 자유롭게 만나는 학교밖 배움터. 달팽이학교
	2	부산 사하구	감천동 빈집재생 사업
	3	경상남도	행복모꼬지
	4	광주 광산구	병원아동보호사
	5	충남 아산시	고령 아파트 경비원
	6	경기도	소방차 출동 정보 119신고자와 실시간 공유·협업
	7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 프로젝트
	8	대전 대덕구	중소기업지원단 운영
지자체 -중앙	1	세종특별자치시	구인난 버스업계 “세종교통사관학교”
지자체 -중앙-민간	1	경북 안동시	생태계 교란종을 지역 상품으로!
	2	충청남도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

주체유형	번호	지자체	사례명
지자체 -지자체	1	서울 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협약 체결
	2	울산 울주군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완등자 인증
	3	경기 안양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4	충북 진천군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5	인천광역시	광역행정의 게임체인저
지자체 -민간	1	서울 동대문구	청년취업 'All-In-One프로젝트'
	2	부산광역시	용두산공원, 랜드마크 관광지로 재도약!
	3	경북 구미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4	광주 북구	금융·고용·복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5	서울 영등포구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구축
	6	전라남도	「100원 택시」전시군 확대 운영
	7	대구광역시	자동화기술 기반 3차원 지도 구축

제2절 사례분석 결과

1. 서울 서대문구 사례(학교 밖 배움터 달팽이학교)

□ 사례 개요 및 내용

- 입시중심의 교육정책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의 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 및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해당 학생들을 보호하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기관 및 교원들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의무로 확대되고 있음
- 정규교육 또는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거나 학업부담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함
- 서울 서대문구 “학교 밖 배움터 달팽이 학교”는 지자체와 지역 내 여러 주체들이 협력하여 이와 같은 교육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민관협력 사례임
 - 마을예술가, 마을공간대표, 구청 및 교육지원청 담당인력, 교사들이 참여하여 프로그램을 논의 및 운영하며, 사업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과 관련한 다각적 논의를 진행함
 - 학생들이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예. 영상, 목공, 애니메이션, 도예 수업 등)을 기획 및 제공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민관협력을 통해 학교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를 효과적으로 개선함
 - 참여 학생들의 학습효과 및 학생과 교사 간 신뢰도 향상에 기여함
 - 학생들의 긍정적 인식 형성에 도움을 주었고, 이를 통해 학생, 교사, 학부모 간 긍정적 관계 변화가 있었음
- 지역 내 인적, 물적 자원 공유를 기반으로 학교 적응이 필요하거나 동기

부여가 필요한 학생들에게 대체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학교 적응력 및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지역특성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체험활동과 네트워크를 형성함
 - 달팽이학교 수업 후에도 학생들과 프로그램 교사(예술가, 분야별 전문가) 간 활발한 소통과 교류가 이루어짐
 - 예술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경험 및 예술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학교 생활 이외에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
-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평가 등은 매우 내실있게 진행되어 왔으나 효율성 제고 및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의 적용이 필요함
 - 해당 사례는 시스템 구축·앱 활용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빅데이터를 활용한 커리큘럼 및 프로그램 개선 등 과학기술의 적용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됨
-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장소 및 인적자원(대안학교 전문가, 교사, 마을 예술가) 공유 뿐만 아니라 지자체 및 교육지원청 등의 공공분야로부터의 정보 제공 등 참여 주체들 간 활발한 자원공유가 이루어짐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학교, 주민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어 어느 정도의 지속가능성은 확보한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체계 등은 미흡한 실정임(약한 지속가능성 확보)
 - 달팽이학교의 운영을 법인 또는 조합 등으로 전환하게 될 경우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 및 장기적 운영에 도움을 줄 수 있음

[표 3-4] 사례1: 서울 서대문구(달팽이학교)

주제	• 교육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기타		
참여주체	• 지자체: 서대문구 • 기타: 교육지원청, 학교, 민간단체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교육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정규교육에 적응이 어렵거나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수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 지역 내 청소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대상	• 외부- 청소년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교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활용: 시스템 구축을 통한 효율성 강화, 앱을 활용한 의견 수렴 및 정보제공 등 • 빅데이터를 활용한 커리큘럼 개선 등	O
자원공유	• 장소, 인력(대안학교 전문가, 교사, 마을 예술가) 등의 공유 • 지자체 및 교육 지원청을 통해 교사, 학생 및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력들의 정보 공유		O
지속가능성	•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 학교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자체, 학교, 주민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 • 협동조합, 법인 등의 장기적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미비		△

2. 부산 사하구 사례(감천동 빈집재생 사업)

□ 사례 개요 및 내용

- 지역 내(감천2동) 공·폐가(약300여동) 및 나대지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지역 경관 훼손, 범죄발생 우려 증가 등의 문제가 제기됨
 - 지역 내 총 주택 수 대비 빈집의 비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총 주택 4,570 가구 중 300여동이 빈집, 전체가구의 6.5%)
- 감천동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 중반 태극도 신도와 피난민의 집단 이주를 통해 형성되었으며, 대부분 공동화장실 및 공동우물을 통해 생활하는 전형적인 고지대 달동네 마을임
 - 인구의 고밀도(면적 0.62Km²에 인구 8,039명(4,043세대)이 거주)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한 편의 서비스의 제공은 미비한 수준임
- 2010년 시작된 “감천문화마을 도시재생사업”으로 생활환경의 개선이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지역 내 많은 빈집과 나대지는 마을의 환경 및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 빈집재생사업은 마을 환경 정비, 주민에게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수 있음
 - 공·폐가 및 나대지 대선을 통해 마을환경을 정비할 수 있음
 -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소득 제고 및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함
- 다양한 주민공동체가 주체가 되어(주민협의회 130명, 통장회 18명, 경로당 23명) 6개 세부사업(감내빨래방, 감내작은목간, 마을지기사무소, 감내골행복발전소, 감내마을공방, 방가방가게스트하우스)을 추진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지역 내 다양한 편의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및 행복 증

진에 기여함

- 감내빨래방 무료빨래서비스(2015. 8. ~ 2017. 8.) : 823세대
 - 감내작은목간 목욕서비스 : 주민회원 130명 이용
 - 마을지기사무소 주택수리 서비스(2015. 7. ~ 2017. 8.) : 집수리지원 1,583건, 무인택배 이용 1,109건, 공구대여 104건, 생활서비스(팩스, 복사 등) 199건
- 지역주민을 위한 일자리창출 및 주민공동체(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함
- 게스트하우스(3명), 마을지기사무소(2명), 감내마을공방(3명), 감내골행복발전소(42명)의 50명의 주민일자리 창출
 - 감내빨래방, 감내작은목간 운영 : 주민 위생 관련 생활서비스 제공
 - 마을지기사무소 운영 : 주민편의의 증대
 - 주민들의 주체적 시설운영관리 및 공동작업 : 커뮤니티 활성화
- 흥물스러운 공·폐가를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으로 활용하는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통해 지역 내 주민행복창출공간으로 재창조함
- 마을특성을 고려하고 주민공동체를 통한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필요성과 만족도가 높은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함
 - 건물의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통해 건축비의 50% 이상을 절감하고 마을의 경관을 보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함
- 특정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해당 사례의 질적 향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 협소한 통행로, 고지대 낙후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구축된 빅데이터는 보다 효과적인 주민편의 시설의 공간 활용에 활용될 수 있음
 - 보다 구체적으로 빅데이터 및 GPS 등을 활용하여 마을주민의 이동과 빈집공간의 상관관계 분석이 가능함
- 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해 장소(빈집 및 나대지) 및 인적자원(주민공동체) 공유뿐만 아니라 일감을 제공하는 관내업체의 참여 및 유관기관(시니어클럽 등)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상생협력 기반이 구축되고 있음
- 주민들의 적극적 참여(자원봉사 등)를 통해 자체인력으로 시설의 운영이

- 가능하며, 지속적으로 참여인원이 확대되고 있음
- 지자체 예산 없이 마을 자체적으로 유지관리가 가능함
 - 지역 내 빈집과 나대지를 활용한 주민편의시설 및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 조성이 추가적으로 진행 중임
 - 타시도 및 기관에서 벤치마킹을 통한 유사사업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음
 - 감천문화마을 주민협의회는 10개의 수익사업장 운영으로 연매출 15억원 및 주민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으며, 공동체 수익금 중 연간 2억원을 주민들을 위한 환원사업에 지출하고 있어 어느 정도의 지속가능성은 확보되었지만, 해당 사업을 위한 지자체 수준에서의 법적 체계 및 예산 등의 지원은 미흡한 상황임

[표 3-5] 사례2: 부산 사하구(감천동 빈집재생사업)

주제	• 빈집재생을 통한 주민편의 개선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기타		
참여주체	• 지자체: 부산 사하구 • 기타: 주민공동체(주민협의회, 통장회), 경로당		
속성	• 하드웨어		
서비스 분야	• 마을공동체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개선 • 지역의 공·폐가로 인한 경관 훼손과 범죄발생의 우려 해소 • 고지대 달동네 지역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마을환경 개선 • 빈집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정책대상	• 외부- 주민(고지대 달동네 주민)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빈집 정보 구축: 효과적인 주민편의시설로의 공간 활용, 마을 환경 정비 등에 활용 • 빅데이터와 GPS를 활용하여 주민편의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	O

자원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소(빈집, 나대지)와 인력(주민공동체) 등의 공유 • 일감 제공을 위한 관내업체와의 상생관계 구축, 유관기관과의 협력 	○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원봉사 등 주민참여의 지속적 확대 • 10개 수익사업장 운영(연매출 15억)으로 지자체 예산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유지관리 가능 • 빈집·나대지 활용으로 주민편의시설 및 수익사업을 위한 공간의 제공 가능 • 타시도, 기관에서의 벤치마킹 및 유사사업이 활발히 진행 중 • 지자체의 법적 체계 및 예산 지원은 미흡 	○

3. 경상남도 사례(행복모꼬지)

사례 개요 및 내용

-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을 통해 도민 접점 서비스 공간을 확대하는 등 공공 자원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민물고기 연구센터의 전시관 시설은 노후되고 협소하여 어린이 및 동반가족의 시설 활용도가 낮음
 - 해당 시설의 주요 대상은 어린이지만, 영유아 대상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부족하여 관람객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함
 -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경우 시설 및 공간부족으로 서비스 인원에 한계(1일 10여명 내외)가 존재하며, 야외 프로그램의 진행이 어려움
 - 민관협력을 통한 서비스의 양적·질적 측면에서의 향상이 필요함
- 공공자원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공공서비스의 가치 창조가 민관협력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음
 - 문화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소도시에 위치한 경상남도 사업소를 카멜레온 공공시설로 개선하여, 시민을 위한 가족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함
 - * 카멜레온 : 특정 공간이 협업·체험·재생·개방·공유 등을 통해 본래 가지고 있던 하나의 고유 기능을 넘어서 새로운 공간으로 변신하는 트렌

드 용어

- 별개 기관에서 각기 운영하고 있던 전시관 및 체험프로그램을 한 공간으로 서비스를 결합하여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함
- 체험프로그램과 가족 상담프로그램을 자연 속에 위치한 공공기관에서 제공하여 모두에게 개방된 공공기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함
- 작은 마을의 이름 없는 전시관에 불과했던 공공시설을 공간 혁신과 협업을 통해 재정비하고, 이를 통해 행복한 시간을 누릴 수 있는 의미에서의 행복 모꼬지 프로그램을 기획함
 - * 모꼬지 : 놀이 혹은 잔치. 여러 사람이 모인다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전시관의 리모델링 및 참여 프로그램의 개발을 병행함
 - 물고기 소개 및 생태관찰, 먹이주기, 만져보기 등의 체험 프로그램이 가능하도록 리모델링을 실시함
 - 영유아 프로그램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을 지역 구분 없이 운영하며, 민물고기 센터를 통해 체험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편함
- 서비스 개선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주민의 만족도 증진 및 공공자원의 공유를 기반으로 공간혁신에 기여함
 - 민물고기 연구센터-건강가정지원센터-밀양시 간 협업체계 구축을 통하여 대민 접점 프로그램이 확장되었음
 - 시설 개방 및 카멜레존을 통한 공공자원의 공유 등으로 인해 공간 혁신 우수사례로 제시됨
- 관할 구분 없는 공공기관의 개방, 전문적인 비영리법인과의 협업 등으로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함
 - 프로그램이 없는 평일에는 마을 주민에게 모임과 힐링의 공간으로 시설을 개방함

- 지자체 관할의 구분 없이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전문성 있는 비영리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향상됨
 - 주민이 많이 찾는 곳에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대민 불편사항을 해소함
- 반면 과학기술의 적용을 통한 개선은 고려되고 있지 않음
- 방문객 정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의 개선, 빅데이터 구축·분석을 통한 예측형 서비스의 제공, 카멜레존의 효과적인 활용 방안 모색 등 과학기술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각 기관의 예산 및 인적자원(전문강사)을 공유하고, 대민홍보와 협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음
- 주기적 회의 개최 및 관리를 통한 의견 조율을 통해 갈등방지 및 조정을 실시하고 있음
- 사후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민물고기 연구센터) 물리적인 시설의 파손 및 노후화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표 3-6] 사례3: 경상남도(행복모꼬지)

주제	• 공공자원의 공유를 통한 서비스 제공 협업행정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기타
참여주체	• 지자체: 밀양시 • 기타: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경상남도 도정혁신추진단, 밀양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속성	• 하드웨어
서비스 분야	• 문화관광
정책효과	공공서비스 개선 • 공공기관 유휴공간의 활용을 통한 도민 접점 서비스 공간 확대(관할 구분 없는 서비스 제공) • 공공자원과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공공서비스 제공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방문객 정보를 활용한 체험프로그램 개발 • 빅데이터 구축 및 분석을 통한 카멜레온의 효과적 활용 방안 모색 등 신규 프로그램 개발 가능	O
자원공유		• 각 기관의 예산 및 자원(전문강사)을 공유	O
지속가능성		• 사후관리 주체를 명시하여 시설 관리 및 노후화에 대한 대책 마련 • 가족맞춤형 프로그램제공으로 지속관리	O

4. 광주 광산구 사례(병원아동보호사)

사례 개요 및 내용

- 현대 사회에는 여성의 사회활동과 육아에 대한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요구가 존재하며, 이에 대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임
 - 여성의 경력단절의 예방·방지에 대한 지원정책 요구와 경력단절 여성의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높은 기대와 수요가 존재함
 - 양육의 사각지대(맞벌이 부부 등)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함
 - 아동 간병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한 교육과정의 요구와 더불어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추가교육의 필요성 또한 대두됨
- 광주 광산구는 계획적인 도시개발로 전국에서 가장 젊은 평균연령과 높은 유소년 인구비율(18.9%)의 특성을 고려한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을 추진함
 - 엄마와 아이를 배려하는 사회적 일자리 요구, 아이를 함께 키우는 마을 공동육아 모델 발굴을 통해 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가 필요함
- 여성 중심 일자리 창출 및 지원정책 추진과 산업도시로서의 육아지원서비스와 아동 전문케어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육아경험이 경력이 됨과 동시에 가사 병행이 가능한 탄력적 근무제도와 결합할 수 있는 여성 친화형 일자리가 필요함
- 근로자들의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근무 환경 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지역사회서비스가 필요함
- 이에 따라 육아사각지대를 위한 사회지원시스템 및 사회적 경제 기반의 사회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 광산형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사업 추진에 따른 육아지원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구체적인 지원을 위해 일자리 창출사업도 함께 추진함
 - 광산구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한 마을 공동체, 공동육아 등의 추진 사업을 함께 운영함
 - 광산구에서 추진되는 크라우드 펀딩, 투게더나눔재단 모금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속적인 사회서비스 지원체제를 구축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여성 친화적인 신규 일자리의 창출 및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사업임
 - 병원아동보호사 교육을 수료한 인력으로 아동병원 전문케어서비스를 제공함. 지역 내 근로여성에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인력들이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함
 - 2017년까지 70명 교육, 67명 수료(14명 보호사로 활동)
 - 협동조합을 설립하여 탄력적 근무제도를 확립하였음(2016. 11. 8. 사업자 등록)
 - 가사 병행이 가능한 탄력적 근무제도와 결합할 수 있도록 여성 친화형 일자리 운영 체제를 정비하였음
- 해당 서비스와 관련한 지역협력시스템을 구축하여 일자리 기반을 확장하였음
 - 일자리 협력망 구축 및 광주 내 9개 병원과 병원아동보호사 짝꿍 협약(2017. 2. 20.)을 실시함

- 대한아동병원협회 어린이전담 간병인 제도 도입을 발표함(2017. 4. 6.)
- 병원아동보호사의 일자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계획의 수립 및 대학 교육 연계형 프로그램의 개발과 함께, 전문케어서비스로의 보편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속적 확장사업을 추진함
- 아이키우기 좋은 도시 만들기 운동본부를 출범하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였음
- 주민참여를 통하여 병원아동보호사 육성기금 조성 및 운동본부를 출범함
 - 1차 크라우드펀딩 : 864만원(시민, 5개 아동병원, 매일유업 참여 등)
 - 2차 및 광주NGO 센터 크라우드펀딩대회 : 1,195만원(아동병원 및 (사)광주디아코니아 참여)
 - 기금조성 : 300만원(서구 우리아동병원 100, 전국아동병원협의회 200)
- 다양한 지역산업과의 협력주체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였음
 - 지역 내 산업단지, 아동병원, 대기업 등의 사업에 적극 참여하였음
 - 중간지원조직인 공익활동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공동체간 네트워크 활성화하였으며, 전문성 강화를 위해 대학 등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음
- ICT 기술 및 크라우드 펀딩 등을 활용하여, 지역주민과 관계기관,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여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지역 내 인식개선을 위한 운동본부 출범을 준비함
- 각 기관의 예산 및 자원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사업이 추진되며, 지속적 사업수행을 위한 기금 조성과 지원금의 확보하였음. 나아가 지자체는 지속 가능한 전문가 육성 시스템의 조성을 위한 조례를 제정함
 - 협동조합을 설립하고 제도적 정비를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음
 - 공익활동지원센터(중간지원조직)의 연계로 주민참여를 확대하였음
 - 협력기관(지역병원, 매일유업 등 지역기업)으로부터의 기금 및 지원금 투자가 증가함
 - 지역대학의 참여로 인해 전문성이 확보된 병원아동보호가를 안정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됨

[표 3-7] 사례4: 광주 광산구(병원아동보호사)

주제	• 육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기타		
참여주체	• 지자체: 광산구 • 기타: 광주지역자활센터협회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사회복지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육아사각지대의 사회지원시스템 마련 • 사회적 경제 기반의 사회서비스 체계 구축 • 여성 친화형 일자리 창출 및 유지		
정책대상	• 외부- 여성, 아동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ICT 과학기술 적용	○
	적용 가능성	• 크라우드펀딩을 통한 육성기금의 조성	○
자원공유	• 관계기관의 예산 및 자원공유 • 협력기관의 기금 조성과 지원금 투자		○
지속가능성	• 지자체 조례 정비 • 협동조합 설립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대학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병원아동보호사)의 안정적 육성 가능		○

5. 충남 아산시 사례(고령 아파트 경비원)

□ 사례 개요 및 내용

- 경비원 처우개선을 위해 실시한 최저임금의 인상으로 인해 오히려 해당 인력의 해고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함
 - 고령자가 대부분인 아파트 경비원의 최저임금을 2015년부터 100%로 적용하면서 경비비의 부담으로 통합관계시스템(무인경비) 전환 또는 인력 감축을 하는 아파트가 증가함
 - 고령실업자 양산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전이될 우려와 함께 고령자들의

질 낮은 일자리사업의 참여로 또 다른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게 됨

- 일몰사업(일몰조례 제정 및 일몰사업 추진)을 통한 고용유지 또는 창출의 정착률 유도가 필요함
 - 아파트 경비는 민간영역의 일자리이지만 고용보조금 등의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사회적 부작용을 감소시킬 수 있음
 - 지역사회가 아파트경비원의 근로여건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론을 환기시키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아파트경비원의 고용 유지 및 창출을 위한 특별지원 조례를 제정함
 - 제도적 지원(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의 고용 불안 해소 및 고령자의 안정적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기여함
 - 경비원의 대량해고 사태를 방지함
- 지자체 정책의 국가정책화 유도
 - 중앙정부(고용노동부)의 고용보조금 및 고용정책에 반영되어 고령 경비원의 고용 및 근로환경 개선 문제를 국가정책으로 대응하는데 기여함
 -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학계, 아산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등의 협의와 노력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전국적 모범사례로 타 지방정부로 확산됨
-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의 개선 및 전문인력 양성교육의 실시에 기여함
 - 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인권 교육과 함께 경비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병행함
 - 아파트경비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을 통한 해당 일자리의 전문화를 추진함
-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회적 책임 의식 수준을 고취하고자 하였음
 - 아산시,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학계, 아파트입주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 의,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토론회, 간담회, 합동설명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사업화를 진행함
- 지자체의 예산지원을 통해 민간분야의 일자리 관련 문제점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사회적 공헌 및 책임을 이해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함
- 예산 및 인센티브(고용보조금)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주체들의 주기적 정보공유로 갈등을 최소화하고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함
- 해당 지자체는 전국최초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고용보조금 등의 예산을 지원함

[표 3-8] 사례5: 충남 아산시(고령 아파트경비원)

주제	• 경비원 고용문제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기타		
참여주체	• 지자체: 아산시 • 기타: 아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생활/편의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고령 아파트 경비원 고용유지 및 창출 촉진 • 지자체 정책의 국가정책화 유도 • 노동인권에 대한 인식 개선		
정책대상	• 외부- 노인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X
자원공유	• 예산 및 인센티브(고용보조금) 통한 사업운영 • 이해관계자들 간의 주기적 의견수렴과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보 공유		○
지속가능성	• 조례제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 확보 • 아파트 입주민 교육을 통해 경비원에 대한 인식개선과 노동인권 이해 → 고용의 질 개선에 기여 • 직접고용을 통해 근로환경개선을 도모한 아파트의 경우 고용보조금을 지급		○

6. 경기도 사례(소방차 출동정보 119신고자와 실시간 공유협업)

□ 사례 개요 및 내용

- 경기도 119 신고처리의 오류 개선에 대한 행정수요 증가와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됨
 - 앱 활용 교통 관련 서비스(예. 택시, 대리운전 등) 이용 시 택시 또는 대리기사 위치·이동 정보가 지도위에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것처럼, 119 신고시에도 유사한 정보의 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관련 수요가 증가함
 - 경기도는 모든 119신고의 처리를 수원과 의정부 2곳에서 담당하며, 119 수보요원이 경기도 내 모든 지역의 지리를 명확하게 알지 못함에 따른 빈번한 출동 오류(예. 수보요원의 지명오인, 지령서 입력 시 오타, 출동소방차 네비게이션 오류 등)가 발생하고 있었음
 - 해당 오류들은 신고자에게는 생명과 재산의 손실, 119 수보요원과 출동대원에게는 민원제기에 의한 징계위험 인식 등의 스트레스 요인이 됨
- 119 신고자에게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신고자에게는 소방차가 도착할 때까지 불안 속에서 막연히 기다려야 하는 수동적인 상황에서 벗어나 상황해결을 위한 능동적인 참여자의 입장이 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함
 - 119 수보요원의 오류 등으로 출동소방대원이 다른 장소로 오인 출동하게 되는 경우, 신고자가 즉시 확인하여 119나 출동소방대 관용핸드폰으로 연락을 줄 수 있어 이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또한 신고자가 홈페이지 내 매뉴얼을 참고하거나 직접 출동소방대에 전화하여 응급조치 지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피해를 경감하고 소방대 도착 후 후속활동을 용이하게 하는데 도움이 됨
- 앱 다운로드 등을 통한 서비스의 제한적 이용이 아닌, 모든 국민이 차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
 - 예를 들어 신고자에게 관련 정보 제공 URL을 문자로 발송하고, 신고자가

수신된 URL로 신고정보 및 실시간 소방차 출동, 매뉴얼 등을 확인할 수 있게 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URL 접속률 및 수혜자의 지속적 증가에 기여함
 - 1년 간(2017.4.6. ~ 2018.4.6.) 573,499건의 119 신고자에게 URL을 전송하였고, 그 중 140,535명이 URL로 접속(25%)하였으며, URL을 클릭한 횟수는 416,033건(73%, 한 사람이 여러 번 접속)임
 - 이후 5개월 간(2018.4.7. ~ 2018.9.7.) 274,153건의 119신고자에게 URL을 전송하였고, 그 중 105,064명이 URL로 접속(38%)하였음
 - 스마트폰 사용의 대중화에 따라 접속률의 지속적 증가가 예상되며, 향후 매년 약 20만 명 이상이 지속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측됨
- 해당 서비스는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에 포함되었고 각종 언론 보도를 통해 전국적 관심과 확산에 기여함
- 국민제안의 수용 및 현실적 애로사항의 파악을 통한 정책의 개선으로 주민 만족도 향상에 기여함
 - 국민신문고 제안의 취지를 정확히 살리면서도 119신고자, 수보요원, 소방 출동대의 현실적인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발전된 형태로 제안내용을 구현하고자 노력함
 - 관계기관 및 관련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활용한 아이디어의 발굴로 저비용 고효율의 정책개선을 이루었음
- GPS 기술을 통한 실시간 위치정보의 제공으로 주민불안 해소, 민원감소, 그리고 출동대원 및 수보요원의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함
 - GPS 기반 기술을 통해 신고자에게 실시간으로 119 소방차의 위치를 안내하여 불안감을 해소시켜주며, 잘못된 출동과 오류로 인한 수보요원 및 출동대원의 스트레스를 감소시켰음

- 차세대통신 과학기술 활용 시 보다 정확한 위치정보의 제공이 가능하며, 더 빠른 정보와 매뉴얼의 처리를 통해 신고자가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위치 정보 및 매뉴얼을 공유하며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종합계획 추진과제로 선정되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음

[표 3-9] 사례6: 경기도(소방출동정보 실시간 공유)

주제	• 소방차 실시간 위치 공유 협업행정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기타		
참여주체	• 지자체: 경기도 • 기타: 소방서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안전/치안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119신고자의 불안 해소 정책과정/업무 프로세스 개선 • 119수보요원의 입력 오류로 인한 소방대원의 출동 오류에 대한 스트레스 감소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내부- 소방공무원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GPS 기술을 활용한 출동대원의 실시간 위치정보 제공	○
	적용 가능성	• 차세대통신 과학기술을 이용하여 신고자에게 보다 정확한 대원의 위치정보 제공	○
자원공유	• 위치 정보 및 매뉴얼 공유	○	
지속가능성	• 해당 서비스의 전국적 시행을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	○	

7. 인천 미추홀구 사례(빈집은행 프로젝트)

□ 사례 개요 및 내용

- 미추홀구는 원도심 주택밀집지역으로 인천지역에서 빈집 분포가 가장 많으며, 다양한 사회문제의 발생이 증가하고 있음
 - 빈집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역 내 청년의 이탈로 인해 마을 침체의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음
 - 재개발 추진과 해제의 반복에 따른 남겨진 빈집으로 인해 도시는 노후, 쇠퇴되었고, 빈집처리하는 마을의 가장 큰 문제로 인식됨
- 빈집을 마을재생의 자원으로 전환하기 위한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함
 - 청년거주와 일자리 등 지역문제 해소를 위해 구도심 주택밀집지역의 빈집을 활용함
 - 민관협력을 추진하여 청년과 마을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를 기획함
 - 인천 미추홀구, LH 인천본부, 청년단체의 빈집 활용에 관한 협약을 통해 마을재생을 위한 도시스마트농장, 커뮤니티 공간, 공용 공간 조성 등의 사업모델을 구축함
 - 빈집활용을 위한 거점공간인 빈집은행의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나타남
- 주민, 청년이 주도하여 마을문제를 도출하고 사회적 협동조합을 결성함
 - 용현1, 4동 100인 원탁회의를 통해 주민과 청년 100명이 마을문제를 도출하고, 마을활동가와 청년사회적기업 중심의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을 결성함
 - 행정안전부 마을공방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함
 - 빈집 업사이클링 및 빈집을 활용한 취창업 등 일자리창출에 기여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마을의 유휴자원을 활용한 마을재생의 새로운 대안모델을 제시함

- IoT와 도시농업의 결합을 통해 지역의 골칫거리인 빈집을 마을의 자원으로 전환하였음
- 마을에 청년유입을 유도하고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스마트도시농장, 빈집 리모델링 전문가 양성과정, 셰어오피스 운영 등 지자체와 청년이 협업하여 마을문제 해결을 노력함
- 청년인구 증가, 일자리 문제 해결 등의 가시적 성과를 도출함
 - 빈집 업사이클링 24채, 스마트도시농장(버섯) 20채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48명을 직접 고용하였으며, 셰어오피스에는 10개의 기업이 입주하여 활동을 시작하였음
 - 유입된 청년들이 마을 집수리 지원, 시설 공유, 마을행사 개최 등의 지역사회와 융화되기 위한 노력을 통해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음
- 오고 싶은 공간, 필요한 공간으로 마을을 변화시키고 쾌적한 청년 마을 커뮤니티로 탈바꿈하는데 기여함
 - 빈집 리모델링을 통해 마을을 청년들의 거점 공간으로 조성하여, 청년들이 마을 활동의 확대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함
 - 도시농장을 운영하고 지역주민들과 상생하며 마을 커뮤니티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민관뿐만 아니라 다수의 유관기관이 협업하고 노력함
- 스마트농업기술을 통한 도시농장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빈집을 재생하여 마을의 자원으로 전환함
 - AI,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시농업은 다양한 작물 재배, 품질 제고 및 생산량의 증대를 통해 마을의 주요 소득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
- 예산 및 자원(예. 빈집, 공유공간 등)의 공유, 빈집을 활용하여 조성한 공간 바탕의 소득 창출,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등으로 관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 및 유지가 가능함

[표 3-10] 사례7: 인천 미추홀구(빈집은행 프로젝트)

주제	• 빈집활용 마을재생을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기타		
참여주체	• 지자체: 미추홀구 • 기타: LH인천본부, 청년단체		
속성	• 하드웨어		
서비스 분야	• 지역개발/환경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빈집해소와 유희자원의 활용 • 청년유입과 일자리 창출 • 도시농장과 청년 마을 커뮤니티 조성		
정책대상	• 외부- 주민, 청년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IoT(스마트농업)	○
	적용 가능성	• AI, 빅데이터를 통한 도시농업을 결합하여 마을 소득자원으로 활용	○
자원공유	• 예산과 자원을 공유		○
지속가능성	•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안정적 프로그램 운영 기반 마련		○

8. 대전 대덕구 사례(중소기업단)

□ 사례 개요 및 내용

- 대덕구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이라는 비전하에 산업단지 지원 및 기업과 지자체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함
 - 기업 지원 및 기업-지자체 간 협력 강화는 지역경제의 성장, 기업 및 산업단지의 유기적 지원체계 구축, 다양한 기업 애로의 수렴 및 해결을 목적으로 함
 - 공장 등록 원스톱 서비스,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 관리지원 실무추진단 운영, 중소기업시책설명회, 기업인과의 소통간담회, 1인 1사 기업도우미 내실화 등의 내용을 추진함
- 기업지원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체계 및 온오프라인 채널 구축의 필요성이 대두됨
 - 부서 간 협력적이고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지원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 중소기업청 등 중소기업지원기관과의 온오프라인 협력 채널을 구축하여 기업애로의 적극적인 해소와 경영활동 지원을 추진하고자 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찾아가는 서비스의 확대로 기업 유치 증가 및 해당 지자체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보 등의 성과를 얻음
 - 찾아가는 중소기업서비스 운영을 확대하여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기업지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적극적인 행정지원을 하였음
 - 부서 간,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하고, 많은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소통 확대 및 언론 홍보 강화에 주력함
-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업지원을 통해 성과를 창출하였음
 - 공장 등록 원스톱 서비스, 중소기업청과 협력한 전문 상담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함

- 산업단지 관리지원 실무추진단을 운영하여 분야별 외부전문가의 자문·토론을 통해 친기업 환경조성을 위한 아이디어 및 기업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함
 - 중소기업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 및 현안·애로사항을 수렴하는 기회로 활용함
 - 매달 기업체 대표 3-4명과 소통간담회를 실시하여 12회 40개 업체와 직접 소통하였고, 밴드(앱) 개설을 통해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함
 - 기업의 작은 불편사항까지도 경청하여 현실적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무원 1인당 1기업을 기업도우미로 지정하여 정기·수시로 방문함(48인 48개 기업체 연계)
 - 산학관 협력사업 및 창업아이템 검증 프로그램을 대학과 협력하여 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
 -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을 통해 판로개척단을 운영함
-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 안건 제안 등 실질적인 규제완화에 노력하였음
- 기업으로부터 제시된 불편 및 애로사항들에 대한 현실적 대응 차원의 관련 법령 개정(안) 및 규제개혁 안건을 제출함
 - 처리된 결과는 간담회를 통해 기업에 피드백하여 신뢰있는 관계를 형성함
- 친기업 환경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은 내실있게 추진하여 왔으나 효과적인 프로그램의 개선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적용이 필요함
- 해당 사례는 기업 현황, 애로사항, 간담회 내용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등의 과학기술의 적용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AI 기술을 선제적으로 기업 응대에 활용함으로써 행정업무의 중복수행 및 인력충원 등의 문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예산 및 자원(조직인력)의 투입과 정보의 공유를 통해 기업과 활발하게 소통하고자 하며, 지자체의 의지가 담긴 법령개정 및 관련부서 신설, 담당 인력 증원 등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됨

[표 3-11] 사례8: 대전 대덕구(중소기업지원단 운영)

주제	• 중소기업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기타		
참여주체	• 지자체: 대덕구 • 기타: 중소기업지원단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행정관리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중소기업 애로사항 및 불편사항 해소 • 기업하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		
정책대상	• 외부- 중소기업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기업 현황, 애로사항, 간담회 내용 등의 자료를 빅데이터로 구축하고 관리하는 등의 과학기술 적용가능성 • AI 기술을 기업 응대에 활용하여 행정업무의 중복수행 및 인력충원 등의 문제 해소에 기여	O
자원공유	• 예산 및 자원 투입 • 정보 공유를 통한 활발한 소통	O	
지속가능성	• 관련 조직의 신설과 인력 증원 • 법령개정 및 규제 완화	O	

9. 세종특별자치시 사례(세종교통사관학교)

사례 개요 및 내용

- 근로기준법 개정(2018.3.20)으로 버스업계 구인난이 가중되고 있음
 - 안전을 위해 노선버스의 장시간 운전을 규제하는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전국적인 승무사원 채용 및 확보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음
 - 근로시간 단축(주68시간 → 주52시간)으로 전국 노선버스 운전자 1.3만명의 추가 고용이 필요하게 됨

- 공공교통운송서비스에의 승무사원 인력 충원 및 첨단기술 접목을 통한 전문성 확보가 필요함
 - 4차 산업혁명시대가 가속화되면서 공공교통의 전문성 확보가 요구되고, 도농 간 균형발전과 안정적 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승무사원 확보의 필요성이 대두됨
 - 신교통수단(예. 전기차, 수소차, 바이모달트램) 및 첨단교통체계(예. BMS, BIS) 등 첨단기술의 도입으로 공공교통운송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세종시는 대중교통의 비중이 도시교통량의 70%에 달하는 대중교통중심도시로 건설하려는 목표를 설정하였음
 - 내부순환 BRT노선을 중심으로 신도심과 읍면노선 간 환승체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정부의 「근로시간 상한 및 휴게시간 보장」에 따라 전국적으로 나타난 승무사원 채용 및 확보의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해 신규 운수종사자의 양성 및 배출이 필요함
- 민·관·산·학이 함께 세종교통사관학교를 통해 일자리정책 프로젝트를 실시함
 - 세종시는 세종교통이 반납한 59개 읍면노선을 인수하고, 도시교통공사를 통해 운수종사자 양성프로그램인 ‘교통사관학교’ 운영을 구상함
 - 세종시·고용노동부(사업비 지원 및 운영 총괄), 세종도시교통공사(실무교육 실시), 한국폴리텍Ⅳ대학(소양이론교육 실시), 대전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프로젝트 연구·지원)의 5개 기관이 협업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버스승무원 인력의 배출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고용노동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창출사업 공모로 세종교통사관학교 모델이 전국 11개 지자체에 전파, 확산됨

- 중부권(대전, 충청) 지역의 버스승무원 전문 인력 배출에 기여함
- 시민 안전,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청년과 중장년의 일자리 사업으로 정책화 됨
- 전문 인력의 체계적·정기적 양성으로 구인난 해소 및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함
 - 연간 75명(기수당 25명, 교육비 전액지원)을 교육하여 71명의 수료생을 배출함
 - 세종시 및 전국 버스운수업체의 취업과 연계하였음
 - 교통사관학교 버스승무원 양성과정 수료할 경우, 기존의 신규 취업자에게 요구되던 1~2년의 버스운전경력 조건을 면제할 수 있게 하여 큰 호응을 얻음
 - 교통사관학교를 통해 버스승무원이 안정적인 전문 직업이라는 인식전환을 마련하였으며, 청년·중장년 및 여성에게 새로운 전문직 취업의 기회를 제공함
 - 운전 실무교육 이외에 한국폴리텍IV대학 주관의 소양교육을 병행하여 양질의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시민에게 질 높은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게 함
- 관계 기관의 자원 및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우수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음
 - 세종특별자치시, 고용노동부, 세종도시교통공사, 한국폴리텍IV대학, 대전 세종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5개 기관의 협업을 통하여 각 기관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함
 - 국민생각함을 활용하여 전년도 사업운영현황 공개 및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를 바탕으로 차년도 사업운영방안을 설계함
- 참여 주체 간 예산, 인적자원, 정보의 상시적 공유를 통해 체계적인 인력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교통사관학교 공사의 설립 및 운영을 통해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음

[표 3-12] 사례9: 세종특별자치시(세종교통사관학교)

주제	• 버스승무사원 양성을 위한 협업행정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중앙		
참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 중앙: 고용노동부 • 기타: 세종도시교통공사, 한국폴리텍대학, 대전세종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속성	• 하드웨어		
서비스 분야	• 지역개발/환경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공공교통의 전문성을 확보한 우수한 버스승무원 양성 • 전문인력의 체계적·정기적 양성으로 구인난 해소 및 양질의 대중 교통서비스제공에 기여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X
자원공유	• 참여주체 간 예산, 인적자원, 정보의 공유		O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사관학교 공사 설립 • 11개 지자체에 전파, 확산 		O

10. 경북 안동시 사례(생태계 교란종 지역 상품화)

□ 사례 개요 및 내용

- 댐·하천 등에 생태계 교란 야생동물 확산으로 환경문제가 발생하고 주민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환경부 지정 생태계 교란종(배스, 블루길 등)은 지속적인 환경부, 지자체의 퇴치·수매사업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포식, 적응력으로 전국 댐, 하천에 확산하여 토종생태계를 위협하고 있음
 - 또한 포획·수매한 생태계 교란종이 대부분(90%) 투기·매립되어 2차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음
- 생태계 교란종의 단편적인 제거가 아닌 주민이 핵심 참여자이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사업이 개발 및 진행되었음
 - 일시적·단편적인 제거 방식으로는 생태교란종의 빠른 확산에 대응하기 어려워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지역 주민들의 공감과 지속적 참여가 가능한 생태교란종의 활용 기술 개발과 지역사회 사업으로의 추진 필요성이 대두됨
 - 지역 대학, 전문가, 민간 기업, 주민 등과의 협업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사업을 구상·발굴하였음
 - '생태교란종 유용자원화 사업'의 개발로 수생태계 보호,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
 - 퇴치 대상인 생태계 교란종을 폐기물이 아닌 자원으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으로 '친환경 어분비료 개발 사업'을 추진함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국내 최초 이동형 제조설비를 개발하여 현장에서 즉석 제도가 가능하게 하였으며, 200㎡ 규모의 공장형 자동화 제조설비도 준공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생태계 교란종의 제거 및 재활용으로 수생태계 환경을 회복하고 해당 어종의 투기·매립으로 발생되었던 2차 환경오염을 방지하는데 기여함
- 포획한 생태계 교란 어류 수매사업과 친환경 비료의 제작·판매로 지역주민의 신규 소득을 창출하였음
 - 어민소득(어류수매 5~6천만원/年), 농가소득(비료판매 연간 4~5천만/年) 창출이 기대됨
- 지자체(안동시), 농협, 주민 간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친환경 어분비료를 시험생산·판매·공급하였음
 - 농가 소유의 유휴 축사를 임차하여 공간적 기반을 마련: 지속적으로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확보하여 생산 과정상의 애로사항을 개선함
 - 주민·어민회 대상 공개시연으로 주민 공동체의 자문을 얻고, 재배작물(배추 등 5종)을 대상으로 어분비료의 효과 및 안정성을 검증 받음
- 수익창출을 위한 체계적 기반 마련 및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생산 공정, 원료수급 방안, 정부인증 및 사후관리 방법 등의 업무절차 체계화, 유지관리·안전성 교육 및 매뉴얼 제공 등으로 성공적으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함
 - 신규공장 설립 및 주민공동체 운영 등으로 지역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
- 예산 및 인적자원(예. 전문가, 연구인력)을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공유하고, 설립한 친환경 비료 제조공장의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전하여 지역주민이 자율적·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함

[표 3-13] 사례10: 경북 안동시(생태계 교란종 지역상품화)

주제	• 생태교란종 제거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중앙-민간		
참여주체	• 지자체: 안동시 • 중앙: 중소벤처기업부 • 기타: 한국수자원공사, 안동대학교, 강원대학교 • 민간: 농협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생활/편의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생태교란종 제거를 통한 수생태계 보전 및 환경보호 • 친환경 비료의 제작·판매로 지역주민의 신규 소득 창출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X
자원공유	• 예산 및 인적자원(전문가, 연구인력) 공유	O	
지속가능성	• 설립한 친환경 비료 제조공장의 운영권을 지역주민에게 이전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지속적 사업 추진 가능	O	

11. 충청남도 사례(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

사례 개요 및 내용

- 충청남도는 로드킬 사고 전국 1위로 도로 안전 위험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
 - 발생건수는 연평균 176건이고, 포유류가 가장 높은 비율(75.4%)을 차지하며 구조 건수 중 차량충돌은 전체 구조 건수의 20%내외를 차지함
 - 국민 안전 보호 및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로드킬 신고가 필요함
- 로드킬 처리는 도로법에 의거하여 도로별로 서로 다른 기관이 처리하고 있고 기관 여건(인력, 예산)이 상이하하여 의견 조율에 많은 시간이 필요함
 - 국민이 신고한 내용을 각 담당기관으로 '어떻게 전송하고 받을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효율적인 처리방안을 찾기 위한 관계 기관과의 기술적 협의도 중요함

- T-map과 연계 로드킬 등 음성신고 플랫폼 구축을 기획함
 - 로드킬 발생 → 음성신고(T-map) → 로드킬 시스템 → 접수(국민권익위원회) → 현장조치(도로관리기관) → 처리정보·자료축적(환경부) → 로드킬 예방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행정안전부 주민체감형 디지털 사회혁신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됨
 -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0백만원을 받음
 - 주요 협력기관으로 SK텔레콤, 국토교통부, 환경부(국립생태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참여함
 - 로드킬 예방 및 신속한 처리를 위한 상호 협력이 추진됨
- 전국적인 신고접수 시스템 구축 구상도 검토 및 신고체계 구축과 관내 도로 관리기관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이 구축됨
 - 도로구간·지역별 관리기관 DB축적, 중계서버가 구축(신고 접수·전송 등)됨
 - 1년간 수차례 협의 요청, 방문, 회의, 토론 및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점 설명 등을 거쳐 로드킬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계 기관(6개) 최종 실무협약이 체결됨
 - 각 기관별 로드킬 처리현황 파악 및 처리방안이 협의되어 바로신고 시스템이 운영됨
- 충청남도 주관으로 로드킬 연구용역 병행을 통해 도로안전성 향상방안을 도출함
 - 도내 지방도를 대상으로 야생동물 로드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자동차 교통사고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로드킬 예방정책 등 정책대안을 마련함
- 민간·기업·정부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문제문제 해결 노력에 동참함

- 로드킬 예방정책 및 정책대안 마련으로 정부 신뢰도 향상의 계기를 마련함
- 신속하고 체계적인 로드킬 바로신고 및 접수 처리방안이 마련됨
-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AI를 활용하여 ICT 디지털 혁신 기여함
 - 해당사례는 차세대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여 2차 사고를 예방하고 빠른 사고의 수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과학기술을 통한 정책 개선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존재함
- 예산 및 자원을 공유하고, 데이터와 정보를 민관이 실시간으로 공유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기관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였음

[표 3-14] 사례11: 충청남도(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주제	• 로드킬 바로신고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중앙-민간		
참여주체	• 지자체: 충청남도 • 중앙: 국민권익위원회 • 기타: 환경부(국립생태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 민간: SK텔레콤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안전/치안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국민 안전 보호 및 2차 사고 예방 •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안전성 향상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AI, ICT	○
	적용 가능성	• 차세대통신을 활용한 실시간정보 공유	○
자원공유	• 예산 및 자원 공유 • 데이터 및 정보 공유	○	
지속가능성	• 시스템 구축과 협약을 통해 지속가능성 확보	○	

12. 서울 강남구 사례(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협약 체결)

□ 사례 개요 및 내용

-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와 기회 불균등 완화를 위한 공교육 강화 서비스의 확대가 필요함
 -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 대한 공교육 강화와 교육 기회 제공에 대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대됨
 - 양자 간 공동이용협약을 체결,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질을 향상하고자 함
- 강남구와 울주군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공교육서비스를 제공함
 - 강남구청(교육지원과): 강남인강 콘텐츠 제작·제공 전담 및 협약기관의 업무 진행에 필요한 기술지원
 - 울주군(교육체육과): 해당 지역 내 학생·수요자 조사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 수강회원 관리, 자체 홈페이지 도메인을 개설해 강남인강 서비스 개시(자체 인강사이트 운영 효과)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강남구-울주군 간 강남구청 인터넷수능방송 공동이용협약을 체결함
 - 2019. 7. 1.자 협약 체결: 2019. 7. 1.~2021. 6. 30. 2년 간 지속
- 울주군은 강남인강 수강권을 구매(1,400매)하여 울주군 내의 수요자에게 배포하고 강남구에서 개최하는 무료 대학입시설명회 등의 개최 시 우선 안내 공문 발송 등의 협약을 실시함
- 울주군 내 공교육서비스 강화의 계기를 마련함
 - 본 협약으로, 해당지역 학생들이 수준별 단계별 강남인강의 2만여 명품강의를 1년 동안 수강함으로써 사교육비가 절감되고 공교육이 활성화됨
 - 지자체 별도의 수능방송 시스템 구축비 및 운영비가 절감됨

- 지역격차에서 기인하는 교육 불평등 완화에 기여함
 - 강남 스타강사 및 특목고 선생님 등 강남에서 주로 활동하는 강사진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접함으로써 원거리 학생들에게 폭넓은 교육기회를 제공함
- 과학기술을 통한 지역간 교육격차의 해소가 가능함
 - ICT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통해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를 제공 가능함
 - 과학기술의 적용을 통해 지역별 수준에 맞는 적절한 강의를 제공하고 원활한 서비스와 지속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지자체간의 정보를 공유하나, 각 지자체의 재협약 논의 및 예산 등의 지원 계획 등은 미흡하여 지속가능성은 다소 약한 것으로 보임

[표 3-15] 사례12: 서울 강남구(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협약)

주제	● 공교육 강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협업행정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지자체		
참여주체	● 지자체: 강남구, 울주군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교육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공교육 강화, 지역 간 교육격차 및 이로 인한 기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양자 간 공동이용협약을 체결, 해당 지역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질을 향상		
정책대상	● 외부- 아동/청소년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ICT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강의 제작 및 시스템 구축	○
	적용 가능성	● ICT 기술을 적용하여 학생·수요자 조사를 통한 원활한 서비스 제공 및 지속적 관리 가능	○
자원공유	● 지자체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		○
지속가능성	● 2년 협약이후 재협약에 대한 논의가 없을 시 기술지원 중단, 재협약 등에 대한 계획 등은 미제시		△

13. 울산 울주군 사례(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완등자 인증)

□ 사례 개요 및 내용

-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과 인근 지역과의 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됨
 -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청도군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일환으로 영남알프스 방문 수요를 자극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지자체 협력사업이 추진됨
- 지자체 협력을 통해 공동의 관광콘텐츠를 기획하고 개발함
 - 2019년 4월부터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정상에서 인증 사진 촬영 후 울주관광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완등자 인증을 실시함
 - 5개 지자체 기관명이 기재된 인증서 및 메달 배송, 완등자 사진의 울주관광 홈페이지에 게시 등 완등보상을 제공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지역 방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지자체간 경쟁이 아닌 상생의 협력모델을 제시함
 - 영남알프스 완등 도전자 및 인증자는 2019년 10월 현재 완등 사진게시자 985명, 완등 556명이며, 울주관광 홈페이지 내 완등게시판 방문자수는 84,644명(일평균 1,192명)으로 나타났음
 - 지자체 간 등반객 유치경쟁이 아닌,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하여 상생발전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는 평가를 받음
 - 대한민국100대 명산, 한국관광100선에 지정된 영남알프스의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해 차별화된 사업 시행으로 방문객의 수요를 자극하고, 재방문을 유도할 수 있음
 - 등반 인증 홈페이지를 오픈 API 방식으로 도입하여 울주관광 홈페이지 사진자료를 모든 지자체가 연계활용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사례는 연계 및 협력이 가능한 다양한 사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매우 높고, 지자체간 콘텐츠 공유와 상생이 가능함

[표 3-16] 사례13: 울산 울주군(영남알프스 봉우리 완등 인증)

주제	• 산악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행정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지자체		
참여주체	• 지자체: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청도군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문화/관광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지자체간 협업을 통하여 이웃 지자체 간 등반객 유치경쟁이 아닌, 상생발전하는 모델 제시		
정책대상	• 외부- 주민, 관광객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ICT 기술을 적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
	적용 가능성	• ICT 기술을 적용한 등반 인증 홈페이지를 오픈 API 방식으로 도입하여 울주관광 홈페이지 사진자료를 모든 지자체가 연계활용 가능	○
자원공유	• 지자체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		○
지속가능성	• 완등자 인증제를 통한 관광객 유치 및 지자체 홍보 확산		○

14. 경기 안양시 사례(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사례 개요 및 내용

- 성장기 학생들을 위한 건강한 식생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우수한 식재료의 효율적 공급 필요성과 안전한 학교급식의 지원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지리적으로 인접한 4개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도모하고자 함

- 대상별(학생, 학부모, 영양선생님, 기관연계) 바른 식생활 지원 및 바른 식생활 시범학교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
 -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공급업체 추천 및 식재료 선정·관리위원회 활동을 지원함
 - 식재료 공급품목 선정 및 공급단가 확정, 생산업체 방문을 통한 우수 식재료를 확보함
- 식재료 안전성 관리체계 확립을 통한 생산지 점검, 안전성 검사 추진 및 학부모 모니터링단 운영, 학교급식 친환경 생산지 체험 등을 구체화 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우수한 식재료의 안전하고 안정적 공급을 위한 법적 지원체계를 확립하고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함
 -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간에 학교급식사업 협력 협약 및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
 - 과천시 운영 참여로 관련 조례 제개정을 실시함
- 공동운영을 통한 운영비용의 절감효과를 가져옴
 - 우수 식재료의 공급체계 개선 및 안정적 공급으로 식재료비 및 물류비 등 운영비의 효율적인 절감효과를 가져옴
 - 과천시 참여로 경기남부 권역단위 지원기능으로 센터의 위상 및 기능이 확대되어, 공동구매사업 등 3개시 전체학교의 친환경식재료에 대한 접근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향상됨
-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식생활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기여함

[표 3-17] 사례14: 경기 안양시(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주제	• 친환경 식재료 확보를 위한 협업행정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지자체		
참여주체	• 지자체: 안양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사회복지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지리적으로 인접한 4개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 지원		
정책대상	• 외부- 아동/청소년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X
자원공유	• 지자체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		O
지속가능성	•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조례 제정 • 과천시의 참여로 경기남부 권역단위 지원 및 사업 가능		O

15. 충북 진천군 사례(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사례 개요 및 내용

- 주민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는 증가하나 의료를 책임질 상급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은 없는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함
 - 중부4군(진천, 증평, 괴산, 음성)은 26만여명(진천군 8만여명, 증평군 4만여명, 괴산군은 4만여명, 음성군은 10만여명)의 주민들이 생활하고 있음
 - 주민들의 의료를 책임지고·사각지대 없는 의료서비스를 담당할 상급병원 수준의 종합병원은 없는 상태로 병원유치는 중부4군 군민 모두의 숙원사업임
-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국가적 사업으로 건설된 충북혁신도시 입주민들의 정주여건 만족도는 전국 10개 도시 중 하위 수준으로 의료분야의 개선 요구가 지속되고 있음

-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1차 후보지로 중부4군중 진천군, 음성군이 선정되었지만, 경기도 6개, 충남도 3개, 경북 1개, 경남 1개의 지자체도 후보로 선정되어 경쟁우위 확보의 어려움이 존재함
 - 소방복합치유센터는 화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소방 공무원 근무환경에 특화된 12개의 내외 진료과목과 300병상이며, 일반인도 이용 가능한 종합병원임
- 중부4군 전체 주민들의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이 대두됨
 - 충북혁신도시를 후보지로 제출한 진천군과 음성군이 모두 1차 후보지로 선정되어 경쟁 시 두 곳 모두 제외될 수도 있는 상황임
 - 중부4군 전체의 주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의 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대두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지역 간 공동 결의문, 지역 내 병원 간 협약서 발표를 통해 지역 주민, 지역 자원의 결집 및 공감대를 형성함
 - 중부4군(진천군, 증평군, 괴산군, 음성군) 단체장들이 종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공동결의 및 공동결의문을 발표함
 -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를 위한 충청도내 병원간 상호협력 협약서를 작성하고 소방복합치유센터 재정지원을 공동 약속함(충청북도, 청주시,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 후보지 단일화와 전폭적지지 결집을 통해 진천군이 센터 설립지로 최종 선정됨
 - 협력·협치·공감 행정의 본보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
- 사회적 난제 해결을 위한 중부4군의 지속적 협력과 협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중부4군 행정협의회를 결성함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은 2023년 준공 예정이며, 대형병원사업의 원활한

- 추진을 위해서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와 1,200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 확보 등 추가적 난제들을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함
- 중부4군은 소방복합치유센터 공동유치를 통해 결성된 중부4군 행정협의회를 통해 소방복합센터의 차질없는 추진에 적극 협조할 뿐만 아니라, 중부4군 전체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적극 협업해 나갈 예정임

[표 3-18] 사례15: 충북 진천군(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주제	• 협력·협치·공감으로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한 협업행정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지자체		
참여주체	• 지자체: 진천군, 음성군, 증평군, 괴산군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생활/편의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협력·협치·공감 행정의 새 본보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계기 행정프로세스 개선 •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지 선정 관련 지자체들의지지, 행정협의회 구축 등으로 대형병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 가능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내부- 중부4군 공무원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X
자원공유	• 지자체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		O
지속가능성	• 소방복합치유센터 건립을 위한 예산확보, 추진을 위한 지속적 협업 및 행정협의회를 통한 발전전략 수립		O

16. 인천광역시 사례(광역행정의 게임체인저)

□ 사례 개요 및 내용

- 지방분권의 확대에 따라 지역특성과 현장정보가 고려된 행정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됨
 - 지방분권시대를 따른 스마트 행정의 추진이 기획됨
 - 광역종합행정에 최적화된 협업 지원시스템 구축 및 시민 중심의 현장정보를 활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
- 현장정보 중심의 강력한 협업체계에 대한 플랫폼 구축 필요성이 증대됨
 - 정보 공유를 뛰어넘어 실시간 정보 융복합이 가능한 플랫폼 인프라 공유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증가됨
- 지역 중심의 행정에 대한 필요성이 강화됨
 - 사업의 목표는 지역 중심의 행정임
 - 현장정보와 행정정보가 실시간 상호작용하는 스마트행정 구현의 필요성이 제시됨
 - 공무원, 시민, 기업이 정보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Smart Hub가 필요함
 - 행정정보의 잠재력 활용을 극대화한 스마트행정의 구현 필요성이 제기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플랫폼 인프라 활용 극대화를 통해 조직의 현장대응 역량을 높임
 - 텍스트 행정에서 모바일시대 위치정보 중심의 행정으로 발전 계기 마련함
 - 부서 간 자발적 협업에 대한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음
- 현장정보 중심의 공유와 협업으로 로컬행정에 대한 집중력이 높아지고 개별 업무에 대한 혁신이 실현됨
 - 실무(협업)부서의 현장업무 능력이 향상되었으며, 개별 업무의 혁신이 실현되었음

- 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시민의 행정정보 활용분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음
 - 스마트행정(<http://imap.incheon.go.kr>)의 다양한 정보(부동산, 교통, 지리 관련 정보 등)는 시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됨
- 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플랫폼 인프라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업분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선도적으로 광역종합(로컬)행정에 맞는 최적의 스마트 행정체계를 갖추었으며, 구성원 간 정보의 공유를 통해 정보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함
 - 플랫폼 인프라를 통한 위치정보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 간 협업이 가능하도록 함
 - 기존의 텍스트 정보에서 현장의 생생한 정보가 포함된 위치정보 기반으로 시각화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해져 시민을 위한 로컬행정이 구현됨
- 인천형 공감마을 스마트 허브를 구축하여 현장데이터 중심으로 시민들의 수요에 기반한 문제를 파악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결정을 지원할 계획임

[표 3-19] 사례16: 인천광역시(광역행정의 게임체인저)

주제	• 광역종합(로컬)행정에 맞는 최적의 스마트 협업행정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지자체
참여주체	• 지자체: 인천광역시, 중구, 강화군 • 기타: 인천보건환경연구원,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속성	• 하드웨어
서비스 분야	• 행정관리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및 행정프로세스 개선 • 선도적으로 광역종합(로컬)행정에 맞는 최적의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 • 텍스트 행정에서 모바일시대 위치정보 중심의 행정으로 발전 계기 마련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내부- 공무원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플랫폼 구축	○
	적용 가능성	• 누적된 빅데이터 정보 및 콘텐츠 공유와 스마트 GIS 인천 정보화 계획 추진	○
자원공유		• 지자체간의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한 행정관리 및 업무혁신 추진	○
지속가능성		• 인천형 공감마을 스마트 허브 구축을 통한 현장데이터 중심의 수요기반 문제 파악 및 의사결정 지원 계획	○

17. 서울 동대문구 사례(청년취업 ‘All-In-One프로젝트’)

□ 사례 개요 및 내용

- 동대문구는 서울시립대, 경희대, 한국외대 등 대학교가 밀집하여 청년층 유동인구가 상존하는 활기찬 도시이나 특화된 산업기반은 취약함
- 지역 내 청년들을 위한 인프라의 부족과 전문성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 고용절벽에 당면한 청년들의 위기 타개를 위한 직접일자리 사업 추진 및 청년들의 일자리 및 문화, 주거 등 다방면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립·성장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사업이 필요함
 - 4차산업 등 미래 일자리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직업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및 훈련사업이 요구됨
 - 동대문구와 청년층이 함께 취·창업 준비 단계부터 인프라 구축 및 성공 단계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모델 발굴이 필요함
- 청년실업 증가 및 경기침체의 장기화에 따른 청년 구직 해소를 위한 일자리 지원서비스 개선과 자립기반의 강화 노력이 요구됨
- 경험 부족으로 준비가 되지 않은 청년층 창업기업의 낮은 성공률(5년 이상 생존률 27%)로 경영 노하우 및 체계적인 창업지원 프로그램 필요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직접일자리 사업의 성과로서 청년일자리 창출을 도모함
 - 동대문구 청년들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원 및 청년직무체험 사업을 통하여 사회적경제기업·공공서비스 기관에 배정함으로써 직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함
 - 취업을 위한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청년일 자리를 창출함
 - 우수 중소 중견 구인기업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를 위한 일자리구하는 날(19Day) 사업을 통하여 지역 고용 창출 및 구인구직난 해소에 기여함
 - 창업훈련부터 현장 훈련, 창업지원, 사후관리까지의 자립운영 모델의 구축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의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
- 지역 내 청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함
 - 지역의 메이커를 위한 드간데메(DDM 일자리발전소)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공간과 매장 운영이 가능해짐
 - 경동시장 내 청년상생 공간(청년몰)과 청년 예술인을 위한 문화예술극장을 조성하여 우수한 청년상인 일자리 제공 및 지역주민에게는 문화복합공간을 제공함
 - 사회적경제 허브센터의 구축을 통하여 동대문구내 사회적기업(15개), 협동조합(88개), 마을기업(4개) 등 사회적경제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 공간을 마련함
 - 캠퍼스타운을 조성하여 지역인재와 청년들이 머무르는 대학가를 조성함
- 청년 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전문교육과 취업을 연계시키는 성과를 달성함
 - 청년 취업 및 창업 아카데미의 운영으로 청년들을 전문교육하여 역량 발전을 지원하고 취업을 연계시킴

- 지역 메이커들을 위한 창작작업 공간인 드간데메를 활용하여 유·무형의 다양한 아이템이나 콘텐츠를 발굴·육성하여 지속 가능한 일자리 성장 모델을 구축함
 - 청년사회혁신 창업스쿨을 운영하여 더 나은 사회가치 실현을 위해 청년창업가를 발굴하고 육성함
- 민·관·학 고용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및 경동시장 등 재래시장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상권 상생 모델을 구축함
-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간 철저한 연계를 통한 정책적 시너지효과를 창출함
 - 청년일자리 위원회 운영 등 네트워크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청년 활동공간 확대, 지역사회 특성에 기반한 정책 발굴을 위한 지속적 연구 등을 추진할 계획임

[표 3-20] 사례17: 서울 동대문구(청년취업 'All-In-One프로젝트')

주제	•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민간		
참여주체	• 지자체: 동대문구 • 기타: 경희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시립대 등 • 민간: 경동시장상인회, 회기동골목상권, 청년몰 등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교육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동대문구와 청년층이 함께 취·창업 준비 단계부터 인프라 구축 및 성공 단계까지 동대문구에서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하고 질 좋은 일자리 모델 발굴		
정책대상	• 외부- 청년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구청, 기업, 대학이 참여하는 취업컨설팅의 빅데이터가 누적되면 이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가상증강현실 등의 과학기술을 적용하여 모의면접, 컨설팅 등의 취업 지원	O
자원공유	• 지자체, 대학, 민간의 정보공유를 통한 청년 실업문제 해결		O
지속가능성	• 청년공간 확대, 정책발굴을 위한 연구추진, 청년일자리 위원회 운영 등의 계획 수립		O

18. 부산광역시 사례(용두산공원, 랜드마크 관광지로 재도약)

□ 사례 개요 및 내용

- 지역 내 상징적인 랜드마크의 노후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수요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이 필요함
 - 용두산공원은 일제 강점기 시절 조성되어, 100년이 넘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지역의 대표공원으로 인식되어 있음
 - 공원 정상의 부산타워는 1973년에 세워져 부산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나 50여년의 세월동안 노후화 되었으며, 부산시민 및 관광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상황임
- 지역의 랜드마크에 대한 재정비 수요의 증대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
 - 용두산공원의 재정비는 부산시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인식되어 왔음
 - 부산시는 2014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실시하며 재정비를 추진하였음
 - * 2014년: 부산타워 재정비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 2015년: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 진흥계획 타당성 연구 용역
 - * 2016년: 용두산공원 관광자원화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지역 내 관계 기관의 전문 영역별 분업을 통한 사업의 추진을 실시함
 - 부산시 : 용두산공원 관련 정책 수립
 - 중구 : 시설 리모델링에 따른 각종 인허가 등 행정 지원
 - 관광공사 : 홍보·마케팅 등 용두산공원 관광 활성화 시책 추진
 - 시설공단 : 기반시설의 개선 및 시설관리 업무 추진
- 용두산공원의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지원을 준비함
 - 관광·편의시설을 크게 ‘관광, 음식, 쇼핑, 체험’ 4개의 존(Zone)으로 구분하여 관광객이 공원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원스톱관광지로 조성하는 활성화 방안을 구상함
 - 전문 노하우를 보유한 관광시설, 판매시설의 민간사업자를 유치함
 - 공원활성화와 민간사업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광특구의 도시공원

내 일반음식점 설치기준 완화하는 규제개혁을 실시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부산시 주무 부서를 비롯하여 산하기관들이 전문분야별로 분업하였고, 그 성과가 민간사업자와 지역사회에 기여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 용두산공원의 랜드마크 관광지로 육성 및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원도심 지역 관광 브랜드 구축함
 - 지역특화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하나의 스토리(원도심스토리투어)로 관심을 이끌어 내도록 브랜드화 실시함
 - 민간사업자를 유치하고 투자를 확보하여 관광상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함
- 관광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가득한 관광특구로 탈바꿈하고자 함
 - 용두산공원 입구 에스컬레이터 캐노피 미디어 패널 설치를 계획하여 도보 이동 방문객의 볼거리 확보함
 - 용두산공원 내 한복관(전통문화체험장) 조성 등 새로운 콘텐츠를 추가하여 기존 관광객 외의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을 시도하고자 함

[표 3-21] 사례18: 부산광역시(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

주제	• 용두산공원 관광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민간
참여주체	• 지자체: 부산광역시, 중구 • 기타: 중부소방서, 부산시설공단 • 민간: CJ푸드빌(주), (주)부산면세점
속성	• 하드웨어
서비스 분야	• 문화/관광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두산공원 랜드마크 및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 원도심지역 관광브랜드 구축 • 민자유치를 통한 관광특구 활성화 	
정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부- 주민, 관광객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ICT 기술을 적용한 관광활성화 방안 마련	○
	적용 가능성	• 빅데이터를 통한 관광콘텐츠 개발 및 체계적 업무시스템 구축	○
자원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민자유치기업 등의 정보공유 • 기관들이 전문분야별로 분업 및 그 성과가 민간사업자와 지역사회에 기여 	○
지속가능성		•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용두산공원 관광상품 개발 계획 수립	○

19. 경북 구미시 사례(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 사례 개요 및 내용

- 사회복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자원 및 서비스 이용자에 맞는 맞춤형 복지 서비스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증대됨
- 다양한 기관 및 단체에서 제공되던 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시스템으로 구축함으로써, 중복을 방지하고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존재함
- 복지지출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문제가 지속되는 공공복지의 한계를 주민참여를 통해 보완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의 실현과 주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의 강화가 요구됨
- 구미시는 전자기기 등 첨단 수출산업의 메카로 일자리를 찾는 인구가 매년 유입되고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존재하나, 경기악화 시 실직 등이 발생하면 지지기반이 없는 젊은 세대의 경우 재산기준, 근로능력 등으로 공적지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복지사각지대로 전락될 확률이 높음
 - 대상 : 수급신청 탈락가구,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등

- 기금조성 : 삼성워킹페스티벌 기부금을 마중물로 하여 현금·현물·재능기부 등 복지서비스용 기금 조성
- 내용 : 위기가정 발굴과 지원 심의체계 구성으로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및 다양한 복지욕구에 맞춘 각종 맞춤형 서비스 지원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주민 참여를 통한 사회문제의 해결과 주민 공감 및 체감도 높은 복지 서비스 제공 기반이 마련됨
 - 예산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지역사회의 문제를 주민들이 스스로 참여함으로써, 현실적인 접근이 가능함
 - 실질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사회문제를 주민들이 관심을 갖고 참여 및 해결함으로써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의 만족도에 기여함
- 지역 내 가용 자원의 통합적 협업을 통한 유기적 협력 서비스 제공의 전국 최초 시도로 평가됨
 - 기존의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혹은 기업과 공공기관, 시민과 공공기관의 이원적인 협업은 많이 이뤄져 왔음
 - 민간단체, 공공기관, 주민, 기업, 병원 및 의원 등 지역 내 가용한 모든 자원이 어우러진 통합적인 협업은 전국 최초의 시도로 평가됨
 - 일선 행정인력으로는 사회문제의 해결이 어려웠던 부문을 지역사회 전체가 참여하여 해결한다는 차원에서의 복지서비스 제공 모델을 제시함
- 지자체의 적극적 행정지원과 체계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의 구축으로 효율적인 서비스도 제공함
 - 법적지원 뿐만 아니라 필요한 부분의 서비스 제공 및 비 수급대상자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킴
 - 일원화되고 체계적인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관리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의 기반을 구축함

[표 3-22] 사례19: 경북 구미시(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주제	• 위기가구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민간		
참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구미시 • 기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관, 구미교육지원청, 구미경찰서, 구미소방서, 복지시설·단체 등 380여개 • 민간: 삼성스마트시티 등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사회복지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수급탈락가구,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 위기가구 지원 •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료비 지원 • 교육비, 취업 지원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ICT 기술을 적용한 통합지원체계 구축	○
	적용 가능성	• ICT 기술을 적용한 통합형 지원체계 구축 및 공유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 해결	○
자원공유	• 지자체, 관계기관 등의 정보공유		○
지속가능성	• 복지, 의료, 교육, 취업 등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복지체감도 향상		○

20. 광주 복구 사례(금융·고용·복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사례 개요 및 내용

- 신용불량 등 금융위기에 처한 서민 증가로 서민금융상담, 고용연계, 자활 복지지원 등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
 - 민선7기 공약으로 금융복지 양방향시스템 구축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한 협업을 강조함
 - 금융위기 서민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주민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 고용, 복지서비스를 1회 방문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공공·민간기관 연계시스템 구축함
 - 대상 : 복구 전 주민
 - 금융 : 서민금융상담 및 자금지원, 채무조정, 소액대출 등
 - 고용 : 중장년,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등 구인·구직 상담 및 취업알선
 - 복지 : 돌봄이웃 자활 및 복지상담, 금융소외계층 자활복지 지원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한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자활복지의 지원을 강화함
 -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복구 유치 및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강화함
 - 서민금융 책자 발간, 금융 서포터즈 홍보, 금융 교육 등 금융복지 지원기반을 마련함
- 광주고용복지센터의 운영을 통해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추진함
 - 사례관리회의를 통한 취약계층 발굴 및 서비스 기관 연계로 자립지원을 도모함
 - 복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가 가능함
- 서민금융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네트워크 협업체계를 구축함
 - 북광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서민금융기관, 지역신보, 근로복지공단, 자활센터 등의 유관기관 참여를 통해 네트워크 협업체계가 유기적으로 구축됨

- 금융기관 지역희망공헌사업을 활용하여 지역민을 위한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주민편의를 증진시키고자 함
- 금융복지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제도의 홍보와 상담 서비스 강화, 맞춤형 금융교육 등을 실시하며, 현장 연계 시책을 개발하여 지속 가능성을 확대하고자 함

[표 3-23] 사례20: 광주 북구(금융·고용·복지 통합서비스)

주제	• 금융위기 주민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민간		
참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북구청 • 기타: 한국자산관리공사, 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전남대학교 대학일자리센터, 고용노동부 광주고용센터, 북구 일자리지원센터,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북구여성새로일하기센터 • 민간: 미소금융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생활/편의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금융소외계층 자활복지 지원 • 맞춤형 고용복지 지원 • 금융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서민금융정책 지원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ICT 기술을 적용한 주민생활 밀착형 서비스의 온라인 SNS 홍보 등 활용	O
자원공유	• 지자체, 금융기관 등의 정보공유		O
지속가능성	• 서민금융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을 통한 네트워크 협업체계 구축을 통한 현장서비스 확대 및 다양한 금융고용복지 연계 시책 발굴 계획		O

21. 서울 영등포구 사례(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구축)

□ 사례 개요 및 내용

- 2018년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미투운동을 시작으로 여성안전이 사회적 이슈로 등장함
- 지자체 직원 동아리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노력이 연계됨
 - 영등포구 ICT혁신 직원동아리인 ‘스마트영등포2020’에서 2018년도 연구 과제 선정 중 ‘우리구는 여성이 얼마나 안심하고 사는 도시인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함
- 지역 내 성범죄의 증가와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불안감이 증가되고 있음
 - 2017년 여성친화도시로 신규 지정되었으나,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불안감 및 성범죄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다양한 정책추진자들과 부서 내 칸막이 현상으로 사회문제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들이 도출됨
 - 정책생산 프로세스를 분업(다양한)-공급자(정책추진자들) 중심에서 협업(공동의)-수요자(정책수혜자인 여성) 중심으로 전환시키자는 결론이 나타나기 시작함
 - 빅데이터 분석기술 기반의 플랫폼 구축을 통해, 통합된 하나의 데이터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정책결정과 추진을 지원하는 행정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출범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공공기관 중심에서 탈피하여 대학과 연계하여 플랫폼을 기획하고, 수요자 중심의 정책생산으로 전환함
 -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과 플랫폼 기획작업을 선행하고, 플랫폼에 반영할 데이터의 범위,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책추진자에 대한 파악, 플랫폼을 통해 구현할 CPTED 정책 등을 논의·결정함

- 범위에 취약한 심야 여성들의 이동경로, 성폭력 등 범죄데이터, 여성1인가구 거주현황을 중심으로 여성안전 관련 시설물 및 여성안심스카우트 이동경로 등을 반영함
- 플랫폼을 기반으로 최적의 여성안심귀갓길 지정을 역점사업으로 채택함
- 영등포경찰서, KT, 구청 내 부서들과 플랫폼의 필요성을 공유하며, 흩어져 있던 데이터들을 모아서 플랫폼을 구축함
 - 경찰서에서는 지역 내 강력범죄 발생현황 및 성범죄자 거주지 등 범죄 데이터를 공유함
 - KT에서는 심야(밤9시~새벽3시) 이면도로 단위 여성 유동인구 데이터 공유함
 - 구청내 부서에서는 여성 1인가구 및 각종 시설물 데이터를 공유하고, 분석을 지원함
- 전국 최초로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분석플랫폼을 구축하여 효율적인 정책결정에 기여함
 - 하나의 화면을 통해 각 기관(부서)에 흩어져 있던 여성안전 관련 데이터들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어 실무자의 업무편의를 높이고,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정책결정을 지원할 수 있음
 -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기반 기계학습(머신러닝) 시스템이 각 데이터가 '안전도'에 미치는 영향을 스스로 분석하여 안전도를 떨어뜨리거나 높이는 요소들에 대해 계산하면서 영등포지역 거리 10m 단위마다 1~5단계 안전등급을 책정함
- 주민(여성)들이 체감하는 범죄 예방 행정서비스를 추진하고, 주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플랫폼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것임
 -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기반으로 수요자(여성) 중심의 정책결정과 지원이 가능함
 - 여성 1인가구의 밀집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세대통신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범위에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여성안심시설물, 센서 등

의 설치가 가능함

- 해당 지역의 데이터가 충분히 확보만 된다면 어디에서나 플랫폼 구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빅데이터 협업행정의 새로운 모델로 제시되기를 기대할 수 있음
- 구청, 경찰서, 통신업체(KT)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주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플랫폼의 실효성을 확보함. 이에 더하여 IoT기반 문열림 센서 200대 추가로 설치하는 등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표 3-24] 사례21: 서울 영등포구(여성안심 빅데이터 플랫폼)

주제	• 여성 안심 귀가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민간		
참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영등포구 • 기타: 영등포경찰서, 고려대학교 • 민간: KT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안전/치안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분석플랫폼 구축 • 영등포지역 거리 10m 단위마다 1~5단계 안전등급을 책정		
정책대상	• 주민(여성)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빅데이터 적용을 통한 통합 분석 플랫폼 구축	○
	적용 가능성	•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데이터를 활용하여 차세대통신 기술을 통한 실시간 정보 제공 및 범죄에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여성안심시설물 설치, 센서 등의 설치 가능	○
자원공유	• 구청, 경찰서, 통신업체(KT)의 데이터 공유를 통한 플랫폼 구축 및 정보 공유		○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여성)이 체감하는 범죄예방 행정서비스 추진 • 주기적인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플랫폼의 실효성을 확보 • IoT기반 문열림 센서 200대 추가 설치 		○

22. 전라남도 사례(100원 택시)

□ 사례 개요 및 내용

-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은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가기 어렵고 생필품 구입을 위해 시장에 가는 것도 맘대로 할 수 없는 등 정주여건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균형적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됨
 - 교통 오지마을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100원 택시 도입을 추진함
- 농어촌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불편함을 전남도와 택시회사, 주민이 적극 참여하여 100원 택시라는 혁신적 교통복지 모델이 기획됨
 - 선정기준 :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교통오지마을
 - 대상시군 : 21개 시·군(교통오지마을이 없는 목포시 제외)
 - 이용대상 : 741개 마을, 21,622명
 - 이용방법 : 주민은 읍·면에서 사전 교부받은 이용권과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고, 운임차액은 재정보전(도, 시군비)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전국 광역지자체 최초로 100원 택시를 전면 시행함
 - 이용자 만족도 : 매우만족, 만족이 81.2%로 높음(이용자의 10% 조사)
 - '16년도 이용실적 : 848,672명(1일 평균 2,490여명 이용)
 - 이용목적 : 병원(37.5%), 시장(34.1%), 친인척(5.3%), 기타(23.1%)
- 지역주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 경제의 활성화 효과까지 발생 가능함
 -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민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함으로써 정주여건을 개선할 수 있음
 - 교통 오지마을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효과까지 발생됨
- 지자체 정책의 전국적 확산 효과와 모범사례로 제시됨

-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으로 채택되었으며, 전국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방안 마련 등 지방정부 사업이 전국화 되는 모범 사례로 제시됨
-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21개 시군에서 정보를 공유함
- 재정보전(도시군비)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표 3-25] 사례22: 전라남도(100원 택시)

주제	• 교통오지마을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민간		
참여주체	• 지자체: 전라남도, 21개 시·군 • 민간: 전라남도 택시회사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지역개발/환경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자동화 기술로 하나의 도시(883.6km ²) 전체를 3D지도로 구축 완료 • 3차원 지도를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X
	적용 가능성	-	X
자원공유	• 전라남도 및 전라남도 21개 시군 정보 공유		O
지속가능성	• 재정보전(도, 시군비) • 문재인정부 공약채택, 전국 확대를 위한 관계부처 방안 마련 등 지방정부 사업이 전국화되는 모범 사례로 전국적 파급		O

23. 대구광역시 사례(자동화기술 기반 3차원 지도 구축)

□ 사례 개요 및 내용

- 대구광역시는 다양한 도시 문제를 효율성 높게 해결하고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스마트시티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스마트시티 플랫폼의 구축을 위해 미래형자동차, 에너지, IoT 등 신기술과 융합할 수 있는 공간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며, 이때 3차원 지도는 필수적인 핵심 요소임
- 3차원 지도의 구축은 기존 사례(국토교통부 브이월드 및 타 지자체)에서 나타나듯, 복잡한 구축 과정과 수작업의 3차원 건물 모델링으로 대도시는 많은 사업비와 시간 소요가 상당한 것으로 확인됨
 - 구글, 애플, MS 등 글로벌한 기업에서의 3차원 지도는 위성사진을 활용하여 컴퓨터 자동화 기술로 구축함
 -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으며 짧은 기간 동안 항공사진을 통해 저비용으로 정사영상, 수치표고모형, 수치표면모형, 3D건물 모델링 등을 자동으로 생성 가능한 것으로 파악함

□ 사례성과 및 분석결과

- 전국 최초로 자동화 기술로 대구광역시 도시 전체(883.6km²) 3D지도를 구축함
 - 총 사업비는 15억을 들여 사업기간은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지역의 모든 건물을 3차원 지도로 재현함
 - 조망권 및 경관분석이 가능하며 표고·면적·경사도 등 3차원 측정하여 제공함
 - 현장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3D 지도를 통해 도시공간을 알 수 있게 되었으며, 관련 서비스를 “대구3D지도(<http://3d.daegu.go.kr>)”를 통해 2018년 2월부터 시민에게 제공함
- 3차원 지도를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도 추진됨

- 국제 웹표준(HTML5, WebGL)의 최신 IT기술을 반영하여 별도의 프로그램 설치 없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실행 가능하도록 함
- 2D와 3D융합이 매우 용이하여 2D의 행정정보와 공간정보를 3차원 지도에 탑재하여 부동산정보, 교통정보, 관광, 경관지원 등 시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
- 3D 자동화 기술은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사업비가 기존대비 80%이상 대폭 절감되고 서버분산 처리로 구축 기간이 매우 짧으며 유지관리 갱신 비용도 저렴함
- 고품질의 차별화된 공간정보 대민서비스 제공 가능함
 - 민간포털에서 제공하지 않는 공시지가, 토지대장, 건축물정보, 실거래가정보 등 부동산 정보를 연계하여 3차원 지도 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전국 최초로 3차원 지도에 도시철도노선, 버스노선, 버스도착정보를 융합하여 대중교통을 쉽게 이용할 수 있음
- 해당 사례는 스마트시티 기반데이터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대민 서비스 및 정책 개선과 대구광역시의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 가능하다고 판단됨
 - 수성의료지구의 스마트시티 구축을 위해 성과품인 3차원 지도를 기반데이터로 활용하여 테스트베드 구축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함
 - 대구의 태양광 발전 입지분석과 전력사용량 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감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과 협력하여 3차원 지도를 빅데이터 분석 기반데이터로 활용 가능함
 - 경관/건축 심의시 심의모델을 미리 탑재하여 도시행정 업무를 지원하고 3차원 지진정보시스템 및 3차원지도 모바일시스템 등의 기본 배경지도로 데이터를 제공함
 - 대구경북연구원은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구축된 3차원 지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연구하고 있음
- 다양한 민간 주체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성과물을 지속적으로 활용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대구시-네이버(주) 간 업무협약(2018년 2월) 및 카카오, 브이월드와의 자료공유(2018년 6월) 등 효율적인 공공서비스의 실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였음

[표 3-26] 사례23: 대구광역시(자동화기술 기반 3차원 지도)

주제	• 스마트시티 조성을 위한 민관협력		
구분	내용		
주체유형	• 지자체-민간		
참여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대구광역시 • 기타: 한국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 민간: 네이버(주), 카카오, 브이월드 		
속성	• 소프트웨어		
서비스 분야	• 행정관리		
정책효과	행정서비스 향상 • 자동화 기술로 하나의 도시(883.6km ²) 전체를 3D지도로 구축 완료 • 3차원 지도를 서비스하기 위한 플랫폼 개발		
정책대상	• 외부- 주민		
분석	내용		여부
과학기술	적용	• IoT 적용	X
	적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시티 기반데이터 및 빅데이터 활용 • 3차원 지도를 빅데이터 분석 기반데이터로 활용 	O
자원공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관/건축 심의시 심의모델을 미리 탑재하여 도시행정 업무를 지원 • 대구경북연구원은 기 구축한 3차원 지도의 다양한 활용 방안을 연구 		O
지속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네이버(주)간 업무협약 체결(2018년 2월)완료 • 카카오, 브이월드와의 자료 공유(2018년 6월)등 민관협력체계 구축 		O

제3절 소결론

- 실무 현장에서의 협업행정은 민-관, 관-관 협업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함
 - 분석 사례들은 시민(민간), 정부(중앙정부, 지자체), 그 외 기관 또는 조직(공공기관, 대학, 연구원) 등의 다양한 주체들 간 협업의 형태로 나타남
 - 따라서 참여 주체를 한정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주체를 고려하여 협업행정의 범위를 탄력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세분화한 참여 주체에 따라 중앙-지자체, 중앙-지자체-민간, 지자체-지자체, 지자체-민간, 지자체-기타 간 협업행정 등으로 분류하였음
- 협업행정이 나타나는 서비스 분야는 제한적이지 않으며 지자체의 현안, 목표, 가치 등을 반영하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교육,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사회복지, 생활/편의,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등으로 서비스 분야를 구분하였음
 - 단 상대적으로 많은 협업행정 사례들이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분야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가 해당 분야와 관련한 행정수요의 증가를 체감하거나 또는 지자체가 설정한 목표의 성취를 위해 이에 대한 문제 해결에 주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협업행정에서의 과학기술의 적용은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해당 서비스의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다수의 협업행정 사례에서 과학기술의 적용은 해당 사업의 질적 개선, 지속적 운영, 수혜자의 편의성 증진 등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해당 협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음
 - 다만 특정 사례의 경우에는 과학기술 자체가 해당 협업을 가능하게 하는 필수적인 요인으로 활용되기도 함

- 예시: 경기 안양시 사례(스마트폰 안전귀가 서비스 앱), 인천광역시 사례(스마트 협업행정), 서울 영등포구 사례(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구축), 대구광역시 사례(자동화 기술 기반 3차원 지도 구축)에서 과학 기술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임
- 다수의 협업행정 사례는 정책대상을 내부 인력보다는 외부 수요자로 보고 있음
 - 정책대상을 내부 인력으로 보는 경우는 행정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관-관(예. 중앙-지자체, 지자체-지자체)협업행정 사례에서 주로 나타나기 때문에 민-관 협업까지 협업행정의 범위에 포함할 경우 상대적으로 빈도가 낮게 나타나게 됨
 - 행정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공공분야의 협업은 오래전부터 진행이 되었으며, 증가하는 외부 행정수요에 주력하고 있는 지자체들의 현실을 감안할 때 공공분야 주체들의 내부고객을 위한 협업의 정도와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을 가능성이 있음
 - 하지만 행정프로세스 개선의 정책대상이 1차적으로는 내부 인력일지라도, 결과적으로 개선된 행정프로세스의 결과물이 외부 고객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간과할 수 없는 요인임
- 예시 1: 경기도 사례(소방차 출동정보의 신고자와 실시간 공유·협업)의 정책대상은 주민(신고자의 불안 해소)과 소방공무원(출동요류에 대한 민원, 스트레스 해소)으로, 외부 및 내부고객 모두를 포함함
- 예시 2: 인천광역시 사례(스마트 협업행정)의 정책적 목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행정 플랫폼의 구축을 통한 행정서비스 향상 및 행정프로세스 개선으로써, 그 대상은 주민과 지자체가 됨
- 분석 결과 협업 참여 주체들 간 예산, 인력, 정보 등은 적절한 형태로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협업행정의 성과 확보를 위해 필요한 필수조건 중 하나임
- 우수한 협업행정 사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

보가 필요함

- 다수의 사례들이 내용 및 속성의 우수함, 참신성 등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의 운영기관·조직(예. 협동조합, 법인) 설립, 전담 부서 및 인력 확보 등이 미흡한 실정으로 나타남

제4장

협업유형 제시

제1절 신규 협업유형 개발 배경

제2절 신규 협업유형 제시

제4장

협업유형 제시

KRILA

제1절

신규 협업유형 개발 배경

- 행정현장에서의 협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지자체 차원에서 협업의 규모, 참여주체, 속성, 사후처리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된 사례는 많지 않음
- 앞선 사례분석에서 도출된 협업의 특성들이 반영된 신규 유형은 급변하는 행정현장, 다양화되고 있는 행정수요에 지자체가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협업의 단계별 시행착오를 줄여 보다 내실 있는 사업을 운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음
- 먼저 본 연구에서는 협업행정의 신규유형을 정책의 대상에 따라 크게 2개로 구분하여 제시함
 - 정책 또는 사업의 대상이 시민일 경우는 사회혁신 협업모델, 대상이 공무원일 경우 행정혁신 협업모델로 유형화함
 - 각각의 유형별 참여주체 및 속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해당 유형의 적합한 서비스 분야와 고려사항 등을 실제 협업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지자체에서 협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명확히 하였음

제2절 신규 협업유형 제시

□ 협업유형 개괄

- 본 연구에서 선행연구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개발한 협업행정의 새로운 유형은 ‘사회혁신 협업모델’과 ‘행정혁신 협업모델’임²⁾
- 각각의 유형은 정책대상, 참여주체, 서비스 분야 등의 측면에서 구별되는 특징을 가지므로, 협업행정의 진행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및 하위유형에 있어서 유형 간 차이가 나타남
 - [표 4-1]은 신규 협업유형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으로서, 각각의 유형별 특징을 비교하여 파악할 수 있음

[표 4-1] 개발된 신규 협업행정 유형

		유형	
		사회혁신 협업모델	행정혁신 협업모델
특징	정책대상	시민(외부고객)	공공주체 자신(내부고객)
	참여주체	공공+민간	공공
	기간	중장기	단기
	서비스분야	제한없음	
		※ 외부의 전문기술·지식활용 관련 분야 적합	※ 민원서비스 및 내부 프로세스 개선 관련 분야 적합
협업 시 고려사항	속성	하드웨어/소프트웨어 사업 모두 적합	
		-	※ 소프트웨어가 주
	자원공유	민간 협업 시 상대방을 대등한 주체로 인식 필요	공공주체 간 위계관계 해소 필요
	과학기술 적용/가능성	민간으로부터 기술 차용	민간으로부터 기술 차용 또는 독자 시스템 구축
	지속가능성	전담부서/인력 확보, 조합 등 기관 설립, 조례 정비 등	전담부서/인력 확보, 행정협의회 등 기구 설립 등
하위유형		환경개선형, 사회복지형, 일자리 창출형	Process개선형, Service확대형 또는 정보공유형, 자원통합형

- 2) 해당 유형들은 본 연구에서 분석된 각각의 협업사례의 정책대상, 참여주체, 서비스분야 등에서 나타나는 대표적 특징들을 고려하여 제시된 것이므로, 개별 사례가 양자 중 하나의 유형에만 제한되어 속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음

1. 사회혁신 협업모델

□ 주요내용

- 사회혁신 협업모델의 정책대상은 시민(외부수요자)이 됨
- 협업의 참여주체는 공공과 다양한 유형의 민간 모두를 포함함
 - 사회적 난제를 효과적·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민-관 또는 관-관 협업을 의미하며, 민-관 협업이 주가 됨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협업이 필요함
 - 사회적 난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단기간 또는 일회성 차원의 협업은 큰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움
- 적용범위는 특정 서비스 분야에 한정되지 않으나 공공부문에서 부족한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적합함

□ 사회혁신 협업모델의 고려사항

- (고려사항 1) 속성
 -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중심 사업 모두에 활용될 수 있는 모델임
 - 특히 민-관 협업은 공공(지자체)의 지원과 민간의 지식·기술 등이 기반이 되는 협업 사례가 많아 소프트웨어 관련 사업에 적합함

〈해당 협업 사례〉

▶ 교육 분야 사례

서울 동대문구 사례(청년취업 “All in one 프로젝트”)

- 다양한 민간주체들(경동시장 상인회,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회기동 골목상권, 사회적 기업 등)의 참여를 통해 사회적 경제허브, 캠퍼스 타운을 구축 및 조성
- 민·관·학 고용 거버넌스 협력체계 구축: 재래시장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상권 상생 모델 구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간 연계를 통한 정책 시너지 효과 창출

서울 서대문구 사례(천천히, 자유롭게 만나는 학교밖 배움터 달팽이학교)

- 서대문구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예술단체 등 다양한 참여주체
- 학교 밖 전문 공간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예술가)과 아이들 간 교감을 통해 새로운 교육현장으로 자리매김
- 서대문구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학사일정 내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사회복지 분야 사례**

광주 광산구 사례(병원아동보호사)

- 여성 일자리 창출: 경력단절 여성의 육아경험을 활용한 일자리 제공
- 맞벌이 부부 및 근로여성을 위한 육아 긴급지원서비스로 개발 및 연계 가능
- 전문가 양성 및 병원·서비스 제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취업 지원 가능

▶ **안전/치안 분야 사례**

서울 영등포구 사례(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구축)

- 영등포구 내 여성1인가구 밀집지역 데이터 활용, 영등포구, 영등포경찰서, KT, 고려대학교 빅데이터융합사업단 간 협업 기반의 플랫폼 구축
- 여성안전 취약 지역 분석, 안전시설물 설치, 순찰 강화 등에 기여

- 또한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지만 하드웨어 사업도 병행되는 투입비용이 많은 지역개발/환경, 문화/관광 분야의 사업에 적합함

〈해당 협업 사례〉

▶ **지역개발/환경 분야(도시재생사업 사례)**

부산 사하구 사례(감천동 빈집재생사업)

- 주민편의시설로의 공간 활용, 마을 환경 정비 등을 위한 빈집정보 구축
- 소프트웨어 사업(빅데이터, GPS를 활용한 서비스 개선)과 하드웨어 사업(공간재생과 재개발-빈집 재생, 내대지 공간의 주민편의시설 구축 등)의 동시 진행

▶ **문화/관광 분야(도시재생사업 사례)**

부산광역시 사례(용두산공원, 랜드마크 관광지로 재도약)

- 소프트웨어 사업(지역특화 관광상품 및 관광콘텐츠(원도심스토리투어) 개발)과 하드웨어 사업(관광 편의시설 확충을 통한 관광특구 지정)의 병행으로 관광객, 기업유치 등에 기여

○ (고려사항 2) 자원공유 여부

- 민·관 협업에서는(특히 용역 또는 수의계약 등에 의한 형태) 지자체의 권한, 역할이 참여주체인 민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클 가능성이 있음
- 이 경우 지자체와 민간은 대등한 참여주체로 인식되지 않으므로 이와 관련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지자체의 협업인식 부족, 참여주체인 민간의 수동적 태도 등은 단순 계약 관계에 국한되어 원활한 협업체계로 발전되기 어려움
- 민간주체를 협업의 파트너로 인식하여 허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인적자원, 관련 정보 등 특정 자원의 공유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해당 협업 사례〉

▶ 협업주체 간 자원공유 사례

광주 광산구 사례(병원아동보호사)

- 광산구, 광주지역자활센터, 지역아동병원, 광주여자대학교 등 다양한 민·관 주체들이 협업하여 여성친화형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주체들 간 정보공유,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기업 기금투자 및 클라우드 펀딩 유치, 실습장소 제공 등 광범위한 협력·자원공유 시스템 구축

○ (고려사항 3) 과학기술 적용(또는 적용 가능성)

- 공공과 민간 간에는 과학기술의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용 또는 제공 받은 민간의 기술을 통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됨

〈해당 협업 사례〉

▶ 과학기술 적용 사례

충청남도 사례(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

- SK텔레콤의 T-map과 연계, 로드킬 발생 시 음성신고 접수에 대한 현장조치 및 처리정보 구축을 통해 2차사고 예방에 기여

서울 영등포구 사례(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구축)

- KT의 심야(밤9-새벽3시) 이면도로 단위 여성 유동인구 데이터 공유 및 분석
- 영등포구의 여성 1인가구 및 각종 시설물 데이터 공유 및 분석
- 영등포지역 거리 10m 단위마다 1-5단계 안전등급을 책정, 이를 반영한 범죄 예방 행정서비스 추진
- 데이터의 주기적 업데이트를 통한 플랫폼의 실효성 확보
- 객관적·과학적 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결정 및 지원 가능

○ (고려사항 4) 지속가능성

- 해당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부서, 인력 확보, 해당 사업을 통해 꾸준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동조합 등의 기관 설립, 제도적 차원에서 의 조례 제, 개정 등이 필요함

〈해당 협업 사례〉

▶ **지속가능성 확보 사례**

충남 아산시 사례(고령 아파트 경비원)

- 조례 제정을 통한 법적 안정성의 확보(고용보조금의 예산 지원)
- 고령 아파트 경비원을 직접고용한 아파트에 대한 고용보조금 지급 등 제도적 차원에서의 혜택
- 이해관계자들 간 주기적 의견수렴, 정보 공유 채널 확보, 아파트경비 전문인력 양성과정 개설 등 일자리 전문화 추진

인천 미추홀구 사례(빈집은행 프로젝트)

- 스마트농업기술 기반의 도시농장 운영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빈집을 마을의 자원으로 전환하여 지속적인 소득 창출
- 미추홀도시재생사회적협동조합 설립으로 안정적인 사업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대전 대덕구 사례(중소기업단)

- 예산 확보 및 전담조직(인력) 운영: 기업과의 활발한 소통으로 기업으로부터 제시되는 불편 및 애로사항을 고려
- 현실적 대응 차원의 관련 법령 개정 및 규제개혁

□ 사회혁신 협업모델의 하위유형

○ (하위유형 1) 환경개선형

- 환경개선형은 새로운 사업 콘텐츠의 구성 및 기존 시설의 재정비, 새로운 기반 시설 마련 등을 통해 지역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하고 지역 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협업의 유형임
- 최종 분석 사례 2, 3, 7, 18, 23에 해당

〈해당 협업 사례〉

▶ 환경개선형 사례 예시

부산 사하구 사례(감천동 빈집재생 사업)

- 공·폐가와 내대지 개선으로 마을환경정비,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일자리 창출공간으로 활용하여 주민들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경상남도 사례(행복모꼬지)

- 마을 소규모 전시관 등의 공공시설에 대한 공간혁신 및 협업을 통한 환경개선
- 시민들이 찾을 수 있을 공간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개방된 공간으로 개발

인천 미추홀구 사례(빈집은행 프로젝트)

- 인천 미추홀구, LH, 청년단체 등이 협업하여 지역의 골칫거리인 빈집을 자원으로 활용
- 스마트 도시농장, 커뮤니티 공간 조성 등에 필요한 지역기반 공간으로 활용

부산광역시 사례(용두산공원, 랜드마크 관광지로 재도약)

- 낙후된 용두산공원의 시설 리모델링, 관광·편의시설 규제완화, 부산타워 개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 민자유치를 통한 전문기관 선정 및 효율적 운영

대구광역시 사례(자동화기술 기반 3차원 지도 구축):

- 스마트시티 조성사업 추진- 스마트시티 플랫폼 및 3차원 지도 구축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도시 문제 해결에 기여

○ (하위유형 2) 사회복지형

- 사회적 취약계층 및 다양한 환경적 요인들로 인해 소외되어 있는 수요자들을 대상으로 정책의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효과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의 유형을 의미함
- 최종 분석 사례 1, 12, 14, 22에 해당

〈해당 협업 사례〉

▶ 사회복지형 사례 예시

서울 서대문구 사례(학교 밖 배움터 달팽이 학교):

- 정규교육 또는 학교생활에 적응이 어렵거나 학업 부담을 겪는 학생들의 학교 적응력을 높이고 그들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지원체계의 구축

서울 강남구 사례(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협약 체결)

- 강남구-울주군 협업으로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 대한 기회 불균등 완화 차원에서의 공교육 서비스 제공

경기 안양시 사례(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 인접한 4개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여 식재료 공급체계 개선 및 학생들을 위한 우수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에 기여

전라남도 사례(100원 택시)

- 농어촌 오지마을 주민이 읍·면에서 사전 교부받은 이용권과 100원을 내고 택시를 이용하고, 운임차액은 지자체에서 지원.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민의 정주여건과 삶의 질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하위유형 3) 일자리 창출형

- 지속적·장기적 운영이 가능한 사업을 마련하거나 수익을 창출하여 지역 내 일자리를 확보함으로써 지역 내 인구 손실 감소, 지역의 생산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협업의 유형임
- 최종 분석 사례 4, 5, 9, 13, 15, 17에 해당

〈해당 협업 사례〉

▶ 일자리 창출형 사례 예시

광주 광산구 사례(병원아동보호사)

- 병원아동보호사 교육 수료 인력이 병원 및 지역 내 근로여성 대상의 아동 케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해당 인력들의 고용 안정성 확보
- 협동조합 설립, 가사 병행이 가능한 탄력적 근무제도 시행

충남 아산시 사례(고령 아파트 경비원)

- 조례제정을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해당 인력의 고용불안 해소 및 고령자의 안정적 일자리 유지에 기여
- 노동인권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 및 인력 양성 교육 실시

세종특별자치시 사례(세종교통사관학교)

- 전문 인력의 체계적·정기적 양성으로 구인난 해소 및 양질의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
- 버스승무원이 안정적인 전문 직업이라는 인식 전환, 청년·중장년 및 여성에게 새로운 취업의 기회 제공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례(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완등자 인증)

- 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청도군에 걸쳐 자리 잡고 있는 영남알프스 산악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충북 진천군 사례(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 화상, 외상 및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등 소방공무원 근무환경에 특화된 12개 내외 진료 과목과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업무에 필요하거나 이와 관련된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

서울 동대문구 사례(청년취업 'All-In-One프로젝트')

- 창업훈련부터 현장 훈련, 창업지원, 사후관리까지의 자립운영 모델 구축 및 청년외식창업 인큐베이팅 사업 운영 등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2. 행정혁신 협업모델

주요내용

- 행정혁신 협업모델의 정책대상은 공무원·공공분야 주체 자신(내부수요자)임
- 참여주체는 제한적이지는 않으나 주로 공공부문의 주체가 일반적임
- 중장기적 관점보다는 단기적·집약적으로 신속한 업무개선을 추구하는 것이 필요함
- 행정프로세스의 보완 또는 개선, 행정서비스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이루어지는 공공-공공 간 협업을 의미함
- 안전/치안, 생활/편의, 행정관리 분야 등 정보제공 및 민원서비스 등과 관련된 분야에 적합함
- 정부부처, 부서, 지자체 간 정보, 인적자원 등의 공유가 필요한 분야에 적절함
- 인구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할 때 제공가능한 행정서비스의 수준이 낮거나 정책적 사각지대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는 지방 시/군 단위 기초 지자체에서 광역행정 기반의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행정혁신 협업모델의 고려사항

- (고려사항 1) 속성
 - 행정 프로세스 개선과 관련한 부서, 부처, 지자체 간 협업에 필요함

〈해당 협업 사례〉

▶ 안전/치안 분야 사례

경기도 사례(소방차 출동 정보 119신고자와 실시간 공유·협업)

- 소방차 출동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경기도와 소방청 간 협업
- 문자(URL)발송 및 홈페이지 접속을 통하여 출동 관련 상세내용의 확인 가능
- 신고자의 불안감 해소 및 출동 위치 오인 시 효율적 대처에 기여

- 또한 지자체 간 협업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공공시설, 기반 마련 등 큰 비용이 투입되는 사업에 필요함

〈해당 협업 사례〉

▶ 생활/편의 분야 사례

충북 진천군 사례(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 중부 4군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하여 종합병원인 소방복합치유센터를 유치
- 음성군으로의 유치 확정 및 2023년 준공까지 중부 4군이 적극 협업할 계획

○ (고려사항 2) 자원공유 여부

- 공공분야 주체 간의 자원공유는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여 원활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함
- 지자체-중앙 또는 기초지자체-광역지자체 간 협업의 경우, 위계적 관계에서의 갈등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 제도적 장치 등이 필요함

〈해당 협업 사례〉

▶ 기초-광역 지자체 간 자원공유 사례

인천광역시 사례(광역행정의 게임체인저)

- 인천광역시는 광역종합행정에 최적화된 협업 지원 및 행정정보 중심의 “플랫폼 행정”을 구축
- 정보, 콘텐츠 공유 및 연계, 융·복합을 위하여 중구, 강화군 등 인천광역시내 기초자치단체와의 자원공유 및 협업체계(인천형 공감마을 스마트 허브) 구축
- 이를 통해 현장데이터 중심의 수요기반 문제 파악 및 의사결정 지원 가능

- 기초지자체-기초지자체 간에는 수직적인 관계가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재정, 인력, 기술 등 각각의 지자체의 여건 및 자원이 상이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균형을 해소하고 원만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체 간 자원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함

〈해당 협업 사례〉

▶ 기초-기초 지자체 간 자원공유 사례

서울 강남구 사례(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협약 체결)

- 강남구-울주군 양자 간 공동이용협약 체결하였으며, 울주군에서 강남구의 강남인강의 수강권을 직접구매하는 방식으로 콘텐츠를 구매하고, 강남구는 무료 대학입시설명회의 우선 안내 등의 제공과 수강회원 관리 등 기술지원을 제공

○ (고려사항 3) 과학기술 적용(또는 적용 가능성)

- 과학기술 적용을 통한 행정 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질적 개선은 보다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해당 업무 관련 인력들의 업무 스트레스 개선 및 서비스 수요자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음

〈해당 협업 사례〉

▶ 과학기술 적용 사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례(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완등자 인증)

- 등반 인증 홈페이지를 오픈 API 방식으로 운영하여 울주관광 홈페이지를 5개 지자체(울주군, 밀양시, 양산시, 경주시, 청도군)가 공유 및 연계 활용
- 연계 지자체 홍보 및 관광객 증가의 효과, 등산객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

서울 강남구 사례(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협약 체결)

- ICT 기술을 적용한 온라인 강의 시스템을 통해 교육소외지역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콘텐츠 제공

○ (고려사항 4) 지속가능성

- 해당 사업을 장기적·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담 부서 및 인력의 확보가 필요함

〈해당 협업 사례〉

▶ 전담부서 및 인력 확보 사례

경북 안동시 사례(생태계 교란종 지역 상품화)

- 협업 주체인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지역학계, 주민공동체 등과 예산 및 인적자원(예. 전문

- 가, 연구인력)을 사업수행 전반에 걸쳐 공유하여 협업과 소통에 제약을 주는 장애요인을 극복
- 안동시 환경관리과에서 생태교란종 관련 업무를 전담: 생태교란 유해 외래어종 잡기 대회, 외래어종 요리대회 등의 행사 개최. 외래어종 퇴치를 위한 지속적인 동참과 관심 유도

- 특히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중앙 등 대외적 협업의 경우 구심점이 되어 해당 사례를 꾸준히 운영할 수 있는 행정협의회 등 기구 설립이 필요함

〈해당 협업 사례〉

▶ 지자체·기관 간 협업을 위한 별도 기구 설립 사례

충북 진천군 사례(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

- 중부 4군 전체의 주민들의 염원인 종합병원의 유치의 필요성을 절감하며, 종합병원 유치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의 필요성이 대두
- 이를 위해 중부 4군이 행정협의회를 결성하여 공동 대응하였고, 소방복합치유센터 유치에 성공. 향후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적극 협력 방안 및 발전전략 수립

□ 행정혁신 협업모델의 하위유형(option 1)

○ (하위유형 1) Process 개선형

- 기관, 부처,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기존 행정 프로세스의 단축과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형임
- 최종 분석 사례 6, 11, 16, 19, 20에 해당

〈해당 협업 사례〉

▶ Process 개선형 사례 예시

경기도 사례(소방차 출동정보 119신고자와 실시간 공유·협업)

- 경기도-소방청 간 협업
- GPS 기반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119 소방차의 위치를 안내하여 신고자의 불안감 해소, 잘못된 출동과 오류로 인한 수보요원·출동대원의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

충청남도 사례(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

- 충청남도,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국립생태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

- 전국적인 신고접수 시스템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행정프로세스의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인천광역시 사례(광역행정의 게임체인저)

- 기존의 단순 텍스트 정보 전달이 아닌 현장 및 위치정보 기반으로 시각화된 정보의 제공으로 시민을 위한 로컬행정을 구현

경북 구미시 사례(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 민간단체, 공공기관, 주민, 기업, 병원 및 의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차원에서 협업
-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요구에 맞춘 각종 맞춤형 서비스 지원

광주 북구 사례(금융·고용·복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 고용, 복지서비스를 1회 방문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공공·민간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 (하위유형 2) Service 확대형

- 수동적인 서비스 공급자에서 벗어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공공부문 주체로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협업의 유형을 의미함
- 최종 분석 사례 8, 21에 해당

〈해당 협업 사례〉

▶ Service 확대형 사례 예시

대전 대덕구 사례(중소기업단)

- 찾아가는 중소기업서비스의 확대: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기업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부서·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
-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소통 확대 및 언론 홍보 강화에 주력함

서울 영등포구 사례(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기획작업, 활용할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결정, 관련 정책 논의 등을 진행
- 심야 여성들의 이동경로, 성폭력 등 범죄데이터, 여성1인 가구 거주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플랫폼 구축 및 대응체계 마련

□ 행정혁신 협업모델의 하위유형(option 2)

- 행정혁신 협업모델은 통합정보시스템 또는 통합 플랫폼을 통해 기존의 부서/기관 등에 산재되어 있는 정보나 권한들을 통합 관리 및 운용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형을 의미함
- 해당 유형은 일차적으로 양질의 정확한 정보 공유, 부서 간 협조과정에서 수반되는 업무지연 단축 등 행정프로세스 및 서비스의 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 또한 결과적으로는 주민이 쉽고 편하게 특정 정보 및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요자 지향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플랫폼 구축의 방법론적 관점에서 해당 유형은 ICT 활용 여부에 따라 세분화가 가능함

○ (하위유형 1) 정보공유형(ICT 기반 플랫폼 구축형)

- ICT를 활용하여 특정 필요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역주민과 담당공무원에게 제공함으로써 행정 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유형을 가리킴
- 최종 분석 사례 6, 11, 16, 21에 해당

〈해당 협업 사례〉

▶ 정보공유형(ICT기반 플랫폼 구축) 사례 예시

경기도 사례(소방차 출동정보 119신고자와 실시간 공유·협업)

- 경기도-소방청 간 협업
- GPS 기반 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119 소방차의 위치를 안내하여 신고자의 불안감 해소, 잘못된 출동과 오류로 인한 수요요원·출동대원의 스트레스 감소에 기여

충청남도 사례(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

- 충청남도,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부(국립생태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등 다양한 주체 간 협업
- 전국적인 신고접수 시스템 및 신고체계를 구축하여 행정프로세스의 개선 및 효율성 제고

인천광역시 사례(광역행정의 게임체인저)

- 기존의 단순 텍스트 정보 전달이 아닌 현장 및 위치정보 기반으로 시각화된 정보의 제공으로 시민을 위한 로컬행정을 구현

서울 영등포구 사례(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구축)

- 수요자 중심의 플랫폼 기획작업, 활용할 데이터의 범위에 대한 결정, 관련 정책 논의 등을 진행
- 심야 여성들의 이동경로, 성폭력 등 범죄데이터, 여성1인 가구 거주현황 등을 토대로 해당 플랫폼 구축 및 대응체계 마련

○ (하위유형 2) 자원통합형(협업기반 플랫폼 구축형)

-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구축된 통합서비스체계를 바탕으로 비용과 시간은 줄이고 더 나은 품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음
- 최종 분석 사례 8, 19, 20에 해당

〈해당 협업 사례〉

▶ 자원통합형(협업기반 플랫폼 구축) 사례 예시

대전 대덕구 사례(중소기업단)

- 찾아가는 중소기업서비스의 확대: 기업과의 지속적인 소통 및 기업지원 관련 정보의 제공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
- 부서·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에 기여
- 기업들의 참여를 위한 소통 확대 및 언론 홍보 강화에 주력함

경북 구미시 사례(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 민간단체, 공공기관, 주민, 기업, 병원 및 의원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통합적 차원에서의 협업
- 위기가정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일원화된 시스템 구축, 다양한 복지요구에 맞춘 각종 맞춤형 서비스 지원

광주 북구 사례(금융·고용·복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 주민이 필요로 하는 금융, 고용, 복지서비스를 1회 방문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국가·지자체·공공·민간기관 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제5장

결론 및 제언

제1절 분석결과 종합

제2절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제5장 결론 및 제언

KRILA

제1절 분석결과 종합

- 협업행정은 공공분야의 주체 간 또는 공공 및 민간주체 간 인력, 자원, 정보 등을 공유하며, 상호 간 협업을 통하여 사회의 특정 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을 의미함
- 행정현장에서의 협업행정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지자체 차원에서 다른 주체들과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특정 사업을 수행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임
-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최근 행정에서의 민관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협업행정의 개념을 정립하고, 사례분석을 통해 협업행정이 필요한 분야, 과학기술 적용 및 지속가능성 확보 여부 등 협업행정 운영 시 고려사항을 제시 하였음
 - 협업행정의 고려사항
 - (참여주체) 최근의 협업행정은 민-관, 관-관 협업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함
 - (서비스 분야) 협업행정의 서비스 분야는 제한적이지 않으며, 지역의 현안 또는 행정수요에 따라 지역개발, 사회복지 등 특정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음
 - (과학기술) 특정 과학기술의 적용은 협업행정의 진행에 도움을 주거나 또는 협업을 진행하는데 필수적인 요인이 됨
 - (정책대상) 협업행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는 것은(내부 또는 외부고객), 해당 협업의 참여주체를 고려한 방향성 확보(민-관 또는 관-관 협업)에 도움을 줌

- (자원공유) 협업 참여 주체들 간 예산, 인력, 정보 등은 적절한 형태로 공유되어야 함
 - (지속가능성) 협업 내용의 참신성, 제도 정비, 전담조직 및 인력 확보, 운영 단체 설립 등은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요건들임
- 추가적으로 본 연구는 행정현장에서의 협업행정의 이해 및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실무적 차원의 신규협업모델을 개발하였음
- 사회혁신 협업모델
 - 정책대상은 외부고객이며, 참여주체는 공공 및 민간 모두를 포함함
 -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협업이 필요하며, 공공부문에서 부족한 전문기술 및 지식의 활용이 필요한 서비스 분야에 적절함
 - 하위유형은 환경개선형, 사회복지형, 일자리 창출형으로 구분됨
 - 행정혁신 협업모델
 - 정책대상은 내부고객이며, 참여주체는 제한적이지는 않으나 공공이 주가 됨
 - 단기적으로 신속한 업무개선을 위한 협업으로, 특히 정부부처, 부서, 지자체 간 자원의 공유가 필요한 분야가 적절함
 - 하위유형은 process 개선형, service 확대형(option 1), 정보공유형(ICT기반 플랫폼 구축형), 자원통합형(협업기반 플랫폼 구축형)(option 2)으로 구분됨

제2절 협업행정 활성화를 위한 제언

- 본 절에서는 문헌연구 및 사례분석으로 도출·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협업 행정의 추진 및 성과창출을 위해서 필요한 협업의 운영방법 및 고려사항을 중앙부처(행정안전부)와 지자체의 차원에서 각각 제시하였음

1. 행정안전부 차원

- (정책제언1-협업행정 개념 정립 필요) 행정주체(지자체, 관련 부서 등)와 협업행정 관련 실무자들의 협업행정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함
 - 기존의 협업행정은 주로 공공분야 주체(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간 이루어지는 협력적 행위를 의미했으나, 최근 정책에의 민간 참여 및 민관 협력의 활성화에 따라 그 범위를 확장시킬 필요성이 대두됨
 - 따라서 협업행정의 참여주체를 공공분야로만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행정수요와 특정 상황을 고려하여 민간 및 다양한 유형의 주체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함
 - 이와 같은 현실을 지자체와 행정현장에 반영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는 협업행정의 기초 가이드라인 또는 관련 교육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표 5-1]은 협업행정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에 대한 예시로서, 협업행정의 기본 개념, 범위, 운영방법 등을 포함하고 있음

[표 5-1] 협업행정 가이드라인 구성 예시

협업행정 개념	- 공공분야의 주체 간 또는 공공 및 민간주체 간 인력, 자원, 전문지식 공유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방식
고려사항/ 운영방법	- 참여주체: 한정된 주체를 벗어나 협업행정 범위의 탄력적 이해 필요 - 서비스분야: 지역 내 증가하는 행정수요 및 지자체의 설정 목표 등을 고려한 서비스 분야 선정 - 과학기술: 특정 사례의 개선을 위한 과학기술 적용 고려 - 정책대상: 명확한 협업행정의 대상(외부 또는 내부) 설정 - 자원공유: 참여주체들 간 예산, 인력, 정보 등의 공유 - 지속가능성: 참신한 사업주제 발굴, 제도적 기반 마련, 사업 운영을 위한 전담 부서·인력 확보

- (정책제언2-협업행정 확산에 필요한 기반 구축) 협업행정 관련 우수사례의 발굴 및 해당 사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필요함
 - 행정안전부는 정기적인 공모를 통해 우수한 지자체 협업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해당 사례의 확산 및 지속적인 성과 도출을 위해서 재정적인 지원을 병행해야 함
 - 협업행정 공모가 사업의 일회적·의례적 선정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발굴된 우수사례에 대한 다년 간에 걸친 중앙정부의 장기적인 예산지원 체계 확보가 필요함
 - 또한 특정 행정서비스의 협업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또는 세액감면 및 세제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하여 해당 협업의 지속적인 수행에 필요한 방안을 마련할 수도 있음
- (정책제언3-협력 중재자 또는 조정자 역할 수행) 지자체 간 또는 지자체와 민간 협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 및 이해관계에 대한 중앙부처(행정안전부)의 조정자 또는 중재자의 역할이 필요함
 - 협업행정은 사회적 이슈의 해결이나 행정프로세스의 개선 등 공공분야의 단일 주체가 단독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다양한 현안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행위이지만, 참여한 다양한 주체들 간 갈등 및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음

- 행정안전부는 직접적인 갈등 조정·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거나 별도의 위원회를 운영하여 참여주체 간의 역할과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여 협업행정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음
- [표 5-2]는 위에서 언급한 갈등조정위원회의 예시로써, 위원회의 역할 및 구성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임

[표 5-2] 협업행정 갈등조정위원회 예시

역할		협업행정에 참여한 주체들 간의 갈등 및 이해관계의 직접적인 조정·중재 등
구성	위원회	위원장(1명. 위원들 중에서 선출), 위원(아래의 제시된 분야 중 편중되지 않도록 선발)
	위원	행정안전부 소속 고위공무원, 대학 교수, 연구원, 협업행정 실무자 및 기타 협업 관련 분야 민간 경력자 등

2. 지방자치단체 차원

- (정책제언1-제도 개선 및 지원체계 정비) 협업행정의 촉진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이 필요함
 - 협업행정의 추진과 관련된 제도의 미흡·부재는 참여주체들 간 협업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음
 - 따라서 지자체는 협업행정 또는 특정 사례와 관련된 자치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원활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 이에 더하여 협업행정을 위한 조직(전담조직, 중간지원조직 등) 또는 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행정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제언2-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한 단체 설립)협업행정 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단체의 설립이 필요함
 - 민·관 주체 또는 주민과 지자체 간 협업은 해당 지역의 현안들을 해결하고 지속적인 정책효과를 발생시키기 위한 것으로써, 이를 위해서는 해당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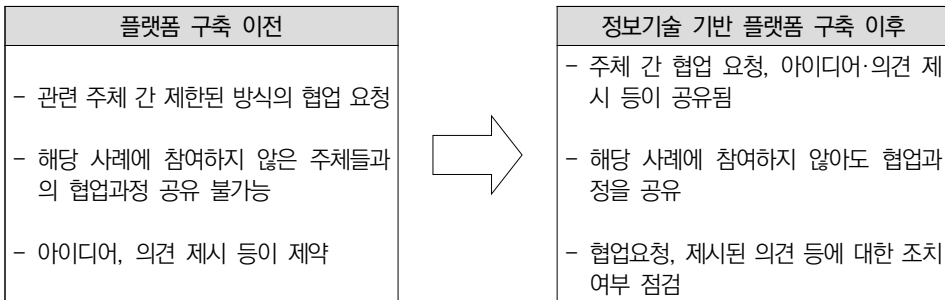
을 통한 특정 결과물이 지속적으로 도출되어야 함

- 해당 협업행정이 일회성 사업에 머무르지 않고,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단순히 새로운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민간을 유도하여 조합, 법인 등의 단체를 설립하고, 이 단체를 통해 성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함

○ (정책제언3-협업 플랫폼/시스템 구축)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협업행정을 위한 융합형 플랫폼 또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함

- 협업행정은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협력행위이지만, 특정 자원 등을 해당 주체들 간에만 공유하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협업 수준에 그치는 경우가 있음을 본 보고서의 사례분석을 통해 확인하였음
- 참여주체들 간 협업 상황을 해당 협업에 참여하지 않은 주체들(다른 부처, 지자체, 민간주체 등)과도 공유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하여 특정이디어와 내용을 공유·개발·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단 공공분야 주체 간 협업의 경우, 해당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공유를 원칙으로 하되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민감한 사항에는 예외를 둘 수 있어야 함
- 정보기술을 활용한 협업행정 플랫폼 구축은 참여주체 간의 자유로운 정보 및 자원 공유, 다양한 주체들의 협업행정의 참여 확대를 가능하게 할 것임
- [그림 5-1]은 협업행정 플랫폼의 구성을 나타낸 것이며, 이를 통해 참여자 또는 주체들은 협업 요청,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협업과정을 공유할 수 있음

[그림 5-1] ICT 기반 협업행정 플랫폼 내용 및 기대효과



- 금창호. (2013). 협업행정의 개념과 성공요인. *자치발전*, 2013(7), 22-28.
- 김윤권. (2014). 정부 조직관리의 협업행정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한국행정연구원.
- 양세진. (2013). 협업행정의 사례. *자치발전*, 7, 29-37.
- 이명석·배재현·양세진.(2009). 협업 행정과 정부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보*, 18(4), 145-171.
- 이재용·김지수. (2020).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개념정립 및 유형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지방자치단체 사례를 중심으로. *국가정책연구*, 34(1), 47-74.
- 이재용·김지수·엄영호. (2019). 행정서비스 공동생산 매뉴얼 개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정책과제.
- 장민선·권채리. (2015). 행정협업 관련 법제 제정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수탁과제.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4). 지방 3.0의 이해와 적용. 박영사.
- 행정자치부. (2013). 2013년 협업행정 우수사례집. 행정자치부.
- Bovaird, T., & Loeffler, E. (2015). *Co-producing Public Services with Users, Communities, and the Third Sector*. Handbook of Public Administration, 235-250.
- Gray, B.(1989). *Collaboration: Finding Common Ground for Multiparty Problems*. San Francisco: Jossey Boss.
- Kagan, S.(1991). *United We Stand: Collaboration for Child Care and Early Education Services*. N.Y: Teachers College Press.
- Silva, C., & McGuire, M. (2010). Leading public sector networks: an empirical examination of integrative leadership behaviours. *The*

Leadership Quarterly, 21(2), 264-277.

- Poocharoen, O., & Ting, B. (2015). Collaboration, co-production, networks: Convergence of theories. *Public Management Review*, 17(4), 587-614.
- Rhodes, R. (2000). The Governance Narrative: Key Findings and Lessons from the ESRC'S Whitehall Programme. in R.
- Shergold, P. (2008). Getting through Collaboration. in J. O'Flynn and J. Wanna. (eds.). Collaborative Governance A New Era of Public Policy in Australia.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E Press, Canberra: 13-22.

구분	광주광역시 (마을문경해결센터)	광주 광산구 (병원이동보호사)	경기 부천시 (노인복지 정책)	부산 금정구 (문화마을 형성)	전남 순천시 (시민운동)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화/관광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O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O	O	X	X	X
구분	충남 아산시 (고령 아파트경비원)	서울특별시 (에너지 복지 실현)	강원 정선군 (폐광지역 군립병원 운영)	강원 동해시 (동해희망디딤네트워크)	부산 사하구 (다대1동 생명수호대)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편의	사회복지	생활/편의	사회복지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O	X	O	X	X
구분	부산 사하구 (감찬동 민집재생 사업)	경기 용인시 (엄마 맘(Mom)을 채우다.)	서울 서대문구 (100가정 보듬기 사업)	서울 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경기 파주시 (DMZ 파주 희망캠프)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안전/치안	사회복지	안전/치안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O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O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O	X	X	O	O

구분	경기 파주시 (복지공동체마을 조성)	경기 고양시 (시정위·주민참여단 동행)	서울 금천구 (청년활동공간 '정춘별당' 운영)	대전 서구 (마을의 문제는 주민 스스로)	대전 대덕구 (중소기업지원단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마을공동체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O	X	X	O
구분	전라남도 (고독사 지원이단 운영)	전남 여주시 (해양레저 전문인력 양성교육)	전남 여주시 (청년정책수립)	전남 여주시 ("버스킹 친국" 만들기!)	전남 고흥군 (맞춤형 복지서비스)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교육	지역개발/환경	문화/관광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O	X
구분	전남 화순군 (통합지원봉사단 운영)	전남 화순군 (복지화순, 한사랑 나눔)	서울 중구 (을지로 노가리를 부탁해!)	서울 중구 ("마른내로 삼별이")	서울 도봉구 (반학진) 한글문화거리 조성 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화/관광	문화/관광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경기 안양시 (복지서비스 구축)	경기도 ("청년주거복지 공동체형 플랫폼")	경기 양평군 (복지관)	경기 성남시 (모란기축시장)	경기 성남시 (공동체 문화 다래이 논골 마을)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마을공동체
과학기술 적용	0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0	X	0	X	X
주체 간 자원공유	0	0	0	0	0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경기 성남시 (에코밸리커튼(EcoValley- curtain))	대구광역시 (착한 결혼식추진)	대구 남구 (글로벌 앞산캠프)	경기 오산시 (함께 만드는 꽃밭)	경기 광주시 (문체 치량 해결)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	안전/치안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0	X
주체 간 자원공유	0	0	0	0	0
지속가능성	X	0	X	X	X
구분	충남 천안시 (공동생산 플랫폼)	경북 김천시 (시민건강학교)	경북 김천시 (취미활동 프로그램)	광주광역시 (지식공유 플랫폼 운영)	광주 동구 (No주매! Yes동구)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교육	교육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0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0	0	0	X
주체 간 자원공유	0	0	0	0	0
지속가능성	X	X	X	△	0

구분	광주 서구 (주민이음 신(新)바람 시스템 구축)	광주 서구 (생명존중 문화조성 및 지자체-기타)	광주 광산구 (광산구 금융복지 상담센터)	부산 진구 (청년창업지원센터)	경기 이천시 (독서마라톤)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사회복지	교육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	X	X	X	X
구분	경기 남양주시 (현답토론회)	전북 김제시 (도서관, 다문화가족, 청소년 화합)	전북 김제시 (희망이음사업)	전북 부안군 (상설 공연)	충북 충주시 (위기가구 주거환경 개선 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교육	사회복지	문화/관광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	X	△
구분	부산 수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부산 수영구 (백산마을 복지학당)	경기 부천시 (부천시아이길센터 진로탐색 지원)	경기 의왕시 (공공-학교도서관 상호대차 서비스)	부산광역시 (평생학습멀리지 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교육	교육	교육	교육
과학기술 적용	X	X	X	○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부산광역시 (구·군·대학 평생교육 협력 사업)	부산 영도구 (봉래시장 목도노포진수병)	경북 구미시 (청년해외취업지원사업)	전남 순천시 (청춘의 꿈을 담은 청춘장고)	강원 평창군 (대관령 황태 120일 체험)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교육	문화/관광	교육	지역개발/환경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O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O	X	X	X
구분	강원 정선군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부산 사하구 (다가서는 복지상남소)	경기 수원시 (수원화성문화제(정조대왕 능행차))	서울 용산구 (우리마을 해방촌)	경기 파주시 (간강직장 만들기 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문화/관광	마을공동체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대전 동구 (대청호반길 답사)	대전 유성구 (꿈나무 과학멘토)	전남 여주시 (단독주택 안전점검)	전남 여주시 (행사·축제 평가 시민평가단 운영)	전남 여주시 (음식업소 시민평가단)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교육	안전/치안	문화/관광	생활/편의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전남 광양시 (치매없는 장수마을 민들기)	전남 무안군 (4분의 기적 소중한 꽃둔타임)	경기도 (경기상상페스티벌 운영)	경기 성남시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경기 성남시 (식중독예방 식품안전교육)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안전/치안	문화/관광	교육	교육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경기 양평군 (가정친화 사회분위기 조성)	경기 포천시 ("Safe-Zone" 조성)	경기 포천시 (섬유산업 매카 조성)	대구 달서구 (지역의료기관과 좋은 만남)	경남 사천시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O	X	X	X
구분	경남 창원군 (이동복지관 운영)	전남 영광군 (청남공간 조성)	전남 영암군 (골든타임은 우리 손으로)	전라북도 (심박농정위원회 운영)	전북 정읍시 (Eco 축산 조성)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전북 완주군 (청년완주 JUMP 프로젝트)	경기 하남시 (피해대견 구조와 보호, 분양)	인천 미추홀구 (빈집은행 프로젝트)	경기 양주시 (어린이 보행안전 미술 만들기)	경기 안산시 (어린이 교통안전- 초록정류장 설치)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X	O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O	X	X
구분	경기도 (소방출동 정보 신고자와 실시간 공유)	대구 동구 (안심연꽃벨리)	경북 봉화군 (건강한 문화공동체)	광주 북구 (워킹맘가정 자녀돌봄 매장)	경기 파주시 (DMZ 파주 희망캠프)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사회복지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O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O	X	X	X	X
구분	경기 파주시 (복지공동체마을 조성)	전북 김제시 (독거어르신 복지 패트를 케어망)	대구 달성구 (우리 청년 R·E·D 교육공동체)	전남 화순군 (백산산업 특구)	충북 옥천군 (차매가 있어도 안심)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사회복지	사회복지	안전/치안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X	O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전북 부안군 (장채밭)	인천광역시 (농산물 잔류농약 기준에 대비)	대전 동구 (함께 만들고 즐겨온 우리동네)	충북 음성군 (음성이야기 마을탐방)	전남 순천시 (생태문화장터)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전남 순천시 (순천시 중앙기획회 수립)	경북 칠곡군 (새농나눔 프로젝트)	경기 오산시 (시물인터넷 공공복지서비스 확대)	경기 오산시 (5070정충드림팀 재능기부단)	경기 안산시 (안산정원벨트)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기타	사회복지	기타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O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O	X	X	X
구분	경기 안산시 (마을재생 혁신 프로그램)	경기 안산시 (시민 주도 마을만들기 사업)	경기 의왕시 (노인재능나눔 "감염병 예방사업")	경기 고양시 (의토키관 협업)	광주 북구 (경제융합지원센터)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기타	안전/치안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경남 창원시 (균형문화마을 활성화)	서울특별시 (건설공사 위기선정 기준 개선)	서울 미포구 (청소년 공교육지원)	서울 서대문구 (IoT 기술로 생명의 길을 지킨다)	서울 서대문구 (암 통합힐링프로그램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행정관리	교육	안전/치안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O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경남 의령군 (뇌노화 지도 사업)	충남 천안시 (오늘미של관 프로젝트)	충남 천안시 (건강은 UP 진로비는 DOWN)	서울 서대문구 (학교밖 배움터 달팽이학교)	충북 증평군 (빈집, 유휴시설 유용)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O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O	X	X	O	X
구분	광주 북구 (대학자산을 활용한 창업기반 조성)	경기 오산시 (목아문동체 국민어린이집)	경남 창원시 (병원이동물류서비스)	경기 파주시 (파주장단물두부를 이용한 인적안전망)	광주광역시 (광주청년 임직원 드림 프로젝트)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기타	기타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O	O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O	X	X	X	O

구분	인양시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	경상남도 수산자원연구소 (행복모피지)	영덕군 (상수도통합운영공간 조성사업)	광주광역시 (광주혁신강좌소 조성사업)	함평군 (폐교를 활용 교육문화 종합복지센터)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편의	문화/관광	사회복지	교육	교육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O	O	O	X
구분	완주군 (일자리 지원센터 시설)	진천군 (국세-지법세 통합민원실 설치)	철원군 (주민대피시설 공간 활용 공장병 휴게소 운영)	철원군 (어린이 실내 상상놀이터 지역아동 돌봄 사업 공간으로 운영)	창원시 ("해군의 집" 공동사용)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생활/편의	교육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O	X	X	X
구분	밀양시 (진로교육원 설립 추진)	밀양시 (수학체험센터 설치)	밀양시 (행복교육지구 운영)	대구광역시 (시민행복센터)	광주광역시관산구 (기림주치의센터 설치)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교육	교육	교육	생활/편의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O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아동 대상 통합서비스 지원)	충주시 (간강복지타운 건립)	부여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보령시 (주민편의 증진 및 업무 효율화)	금산군 (‘국제 지방세 통합민원실’ 설치)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사회복지	안전/치안	생활/편의	생활/편의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옥천군 (면사무소 내 안남(일반)우체국 신설)	부산광역시남구 (청년창업 활성화 지원)	부산광역시장군 (기초자치단체·국가기관 한지붕 두기축)	대전광역시서구 (치매통합관리서비스 제공)	봉화군 (시골 간이역 「문천 신타마을」)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편의	지역개발/환경	기타	사회복지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X	O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O
구분	대구광역시 (‘소셜클라우드’ 편당)	대구광역시 (‘기업에로해결비밀회 개최’)	경기도 (경기도의료원 수송실 CCTV 설치·운영)	경상북도 (대경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HuStar))	성남시 (성남시-국토지리정보원 항공사진 공동활용)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기타	기타	안전/치안	교육	생활/편의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인양시 (북한인지기술 개발추진)	의왕시 (서울대학교, 의왕시 SAM 멘토링)	파주시 (개발행위허가(토지분할) 절차 간소화)	파주시 (안전한 병영생활)	파주시 (웰빙산 명품 칠썩동산 만들기)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교육	생활/편의	안전/치안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포천시 (수선유지급여사업)	강릉시 (강릉시 대학상생발전협의회)	속초시 (재난대비 긴급구조 종합훈련)	청주시 (청주문화재아일랜드 운영)	청주시 (광역상수도 활용 상습기물 해결)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기타	교육	안전/치안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청주시 (“함께해우 착한운전” 캠페인)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 안심마을(CPTED))	천안시 (드로 협업체계 구축)	천안시 (천안여중 앞 도로 통학환경 개선)	천안시 (교통수용, 아파트 방문사설)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안전/치안	안전/치안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	○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	○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당진시 (복사켄 네트워크)	당진시 (국제교육도시연합)	정음시 (금연계획을 지표 개선)	정음시 (정음시-도공사 진북본부 협업)	정음시 (정음시-구동귀촌협의회 협업)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기타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경산시 (새터민, 조폐공사, 커피한잔사랑모금)	청원시 (범원 이동 돌봄서비스 시행)	통영시 (윤이상기념관, 자활 신규일자리 창출)	김해시 (공동세탁소 설치)	김해시 (순환자립형 마을공동체)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기타	사회복지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김해시 (회현동 여름강장)	울주군 (공간정보 합동지원)	울주군 (전통시장 幫, 살리기)	음성군 (강동대학교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부여군 (부여군-한국전통문화대학교 상생)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교육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O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진안군 (자동차 정기검사위반 과태료 줄이기)	진안군 (도동리 청자요지 국가 사적 지정)	진안군 (귀농귀촌 마이스터학교 운영)	진안군 (농촌 이허 및 봉사활동 활성화)	해남군 (인심 보안을 설치)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예산군 (평생학습관운영)	함안군 (함안고 주차장 조성사업)	함안군 (군 징벌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운영)	고성군 (컬식이동 급식안전망 구축)	거창군 (임환자를 위한 간강주치의제)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교육	생활/편의	교육	사회복지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O	X
구분	서울 강남구 (청담역 미세먼지 프리존 조성)	서울 강남구 (자전거기 미관 개선)	서울 강남구 (친환경 전기자 보금 확대)	서울 강남구 (이동친화도시 조성)	부산 강서구 (송아들양 포획방법 개선)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편의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서울특별시 (병원-집 지역사회(가정) 복지 지원)	서울 동작구 (어르신2020년 국제진료 간호사 전문과정형년 세대공감 복합시설 건립)	부산광역시 (대학생 사회기여 미일리지제도)	부산광역시 (SW 마이스터고 부산유치 추진)	부산광역시 (학교 분류식하수관로 연결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기타	교육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인천광역시 (공사지연도로 공사 재개)	인천광역시 (국민 참여 빈집활용 프로젝트)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 교통사고 줄이기)	광주광역시 (시 공공기관 통합제용)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안전/치안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대전광역시 (재난 예·경보 시스템 구축)(폭력 없는 안전사회 실현)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안전사회 실현)	울산광역시 (건강한 전통시장 만들기 사업)	울산광역시 (지역안전지수 전국 최고수준 도약)	울산광역시 (가스저장시설 내진성능확인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안전/치안	사회복지	안전/치안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강원도 (강원발전연구원 스타트업 프로그램)	강원도 (청소년이동센터 운영)	충청북도 (농촌환경병원)	충주시 (신륵전기자동차 활용, 화재시 골든타임 확보)	충청북도 (실종자 수색 구조, 드론)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교육	사회복지	기타	안전/치안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	X	X	X	○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X	X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	X	X	X	X
구분	충청북도 (사이버 아학교육 무료서비스)	전라북도 (화재피해주민 장검다리주택 지원)	전라북도 (사회적경제 온라인 판로 개척)	전라남도 (일자리사업, '일자리꿈터' 개월)	전라남도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교육	사회복지	기타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
구분	전라남도 (전남 공공연구장비 공동활용)	경상남도 (통합교육추진단 설치)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도서관과 마을도서관의 상생)	제주특별자치도 (편리한 교통 환경기반 조성)	제주특별자치도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 조성)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기타	교육	교육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제주특별자치도 (원도심 혁신성장 거점 조성)	평택시 (철도공사 소유 토지 주차장 조성)	남양주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운영)	안성시 (국세·지방세 통합민원실 실치)	광주시 (농평초등학교 복합화 시설 건립)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생활/편의	생활/편의	교육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양주시 (공인용수 공급 협약 기업에로 해소)	춘천시 (관학 상생·협력체계 구축)	충주시 (정신건강 SOS구조대 운영)	서산시 (진로진학상담센터 운영)	서산시 (군소음원 제정, 소음피해 해결)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기타	안전/치안	교육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목포시 (2019 안전환 목포민들기)	순천시 (담장 허물기 "소통길" 조성)	순천시 (순천만 미니리 용수 공급사업)	포항시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진주시 (육용새들마을 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마을공동체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밀양시 (우리 동네 안전마을 만들기)	정선군 (민원해결 민관 협업 네트워크 구성)	중평군 (무로빈을 상담서비스 제공)	서천군 (여성 안전, 팽 등)	구례군 (C형 간염 퇴치 협업사례)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생활/편의	생활/편의	안전/치안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고흥군 (맞춤형 민원·복지 서비스)	영암군 (농업인 웰컴체 지원)	영암군 (남세재보호관 세무컨설팅 현장 지원)	청송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	창녕군 (창녕경찰서 이전 신축부지 조성)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사회복지	생활/편의	기타	기타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서용성산구 (주저난 해소, 공유주차장)	서울성동구 (스마트 CCTV 영상판제시스템 공유)	부산사하구 (취사 약자 인덕션 지원사업)	부산수영구 (빌로 푸는 협업)	부산광역시 (불꽃축제 성공개최 위한 협업체계)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지자체-기타
서비스 분야	생활/편의	안전/치안	사회복지	기타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울산남구 (수자원공사 국유지, 공영주차장 조성)	경기 파주시 (내재해 스마트핀전용 시설하우스)	전남 여수시 (여수산사지간 화재 조속한 피해복구)	세종특별자치시 (구인남버스연계 "세종교통사관학교")	경산남도 (스마트공장 지원센터 설치)
주체 유형	지자체-기타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서비스 분야	생활/편의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O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	X	O	X
구분	교육부 (대학생 연합기숙사 건립)	천안시 (다문화이주민*센터 설치)	파주시 ("디엠지(DMZ) 평화의 길" 사업)	통영시 (빅데이터 기반, 행정서비스 제공)	국세청 대전지방국세청 (진전-음성혁신도시 세무지서 신설)
주체 유형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서비스 분야	교육	사회복지	문화/관광	행정관리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O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대전지방기상청 (폭염피해예방 위한 댐사물 스케줄러)	거창군 (거창반조타운 길등해결 관련)	부산광역시 (스마트 헬스케어 클러스터 조성)	전라북도 (혁신도시 악취 해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주체 유형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O	X	O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O	X	X

구분	오산시 (Smart-City 통합운영센터)	원주시 (국유지 무상귀속)	법제처 (자치법제 협업센터 운영)	국도교통부 (스마트시티(U-City) 통합플랫폼)	국도교통부 (철산타워 주변지역 공동 개발)
주체 유형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0	X	X	0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0	X	X	0	X
주체 간 자원공유	0	0	0	0	0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행정안전부 (섬의 날 기념행사 추진)	서울마포구 (스마트 서울 통합 플랫폼 구축)	부산광역시 (세외수입 고지서 전자납부)	포천시 (민원서비스 전달체계 개선사업)	안동시 (생태계 교란종을 지역 상품으로!)
주체 유형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	지자체-중앙-민간	지자체-중앙-민간	지자체-중앙-민간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안전/치안	행정관리	생활/편의	생활/편의
과학기술 적용	X	X	0	0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0	0	X
주체 간 자원공유	0	0	0	0	0
지속가능성	X	X	X	X	0

구분	세종특별자치시 (「네이버 제2 데이터센터」 유치)	충청남도 (로드킬 바로신고 시스템 구축)	부천시 (스마트 주차서비스)	화성시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양주시 (장애인의 정서적 교감 및 자립)
주체 유형	지자체-중앙-민간	지자체-중앙-민간	지자체-중앙-민간	지자체-중앙-민간	지자체-중앙-민간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생활/편의	생활/편의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0	0	X	0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0	0	X	0
주체 간 자원공유	0	0	0	0	0
지속가능성	X	0	X	X	X

구분	계룡시 (2019계룡세계문화축제)	구례군 (천은사 입장료 폐지)	고양시 (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	경주시 (배수관도 공동이용)	서울서대문구 (무악재 하늘다리 완성)
주체 유형	지자체-중앙-민간	지자체-중앙-민간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문화/관광	생활/편의	생활/편의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인천광역시 (광역행정의 게임체인저)	청주시 (공공하수처리시설 공동사용)	경기도 (지역화폐 31개 전 시군 본격 발행)	동두천시 (동두천 신시가지 위취해소)	부산진구 (골드타임사각지대 119 지역대 활동)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행정관리	생활/편의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O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O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	X	X	X	X
구분	수원시 (하수통합처리)	서울은평구 (생활형 SOC 복합센터 구축)	의왕시 (상생협력시설 "의왕하늘꿈터")	지천군 (소방복합차유닛터 유치)	평택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공동 사용)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마을공동체	생활/편의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O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O	X

구분	하동군 (하동, 남해 지역 '화합의 다리')	강원도청 (찾아가는 청소년이동센터)	파주시 (공동재실체계 구축사업)	의왕시 (하늘꿈터 전시시설 (봉안당) 증설)	함안군 (우리마을 1cm 문화센터)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안전/치안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O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O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O	X	X	X
구분	상주시 (산불예방 및 진화용 헬기 임차)	예천군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확충)	광주광역시 (문화예술 협업 플랫폼)	서울중로구 (혜화문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순창군 (정수벨트협의회 공동사무국 설립)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생활/편의	문화/관광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O	O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O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진천군 (청소년 문화의 집 증축)	속초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속초시 (폐기물 연계처리시설 설치)	통영시 (광역자원화수시설 설치)	통영시 (해양안전시스템 구축)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X	X	X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O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울산광역시 (상수도 교차요금)	공주시 (화장시설 공동이용)	보령시 (공설 수목정리, 봉안담 조성)	보령시 (체합관관 네트워크 구축사업)	김천시 (성도불 산책마을 & 행복버스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마을공동체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X	X	O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O	X	O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대구광역시 (광역 무료 환승 시행)	대구광역시 (체널차량 빈호판 합동영지)	경기도 (행정구역 경계조정)	경상북도 (도청신도시 발전협의체 구성·운영)	수원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생활/편의	생활/편의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O	O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O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수원시 (불합리한 행정구역 경계 조정)	성남시 (미세먼지 대응 지방정부 연대선언)	인양시 (공동급식지원센터 운영)	인양시 (안심귀가 엠 11개 시 공동사용)	동두천시 (신시가지 약취해소)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O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O	△	X

구분	의왕시 (상생협력시설 "의왕하늘꿈터")	파주시 (공간통합시설공유형 협업 사업 공모)	김포시 (수도권매립지 하수슬러지 지분양도)	포천시 (관암-미산 지반도 364호선 용방터널)	동해시 (동해안권 상생발전협의회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동해시 (동해-삼척 화장장 공동 건립)	속초시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교육장 조성)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나래원 정사시설 공동이용)	당진시 (미세먼지 대응 위한 지방정부 연대)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마을공동체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O	X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정읍시 (화장시설(서남권추모공원) 공동운영)	상주시 (서울농상 운영지원)	상주시 (김꽃마을 서울캠핑장 조성)	영천시 (광역 환승시스템 구축사업)	창원시 (시내버스 광역환승시스템 구축)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문화/관광	생활/편의	생활/편의
과학기술 적용	X	X	X	O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함안군 (마을문화센터 조성사업)	김해시 (폐기물 소각시설 광역화 사업)	통영시 (폐기물처리의 광역화, 선진화 실현)	김해시 (광역활성화인제)	울주군 (영남알프스 9개 봉우리 원동자 인증)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O	O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O	O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O
구분	진천군 (중부4군 공유도시 협력사업)	진천군 (청소년 두드림(Do Dream)센터 운영)	음성군 (중부4군 공유도시 추진)	단양군 (법제화추진행정협의회 설립 주관)	부여군 (관광시설 주민 공동이용 지원)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O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공주시 (나래원 화장장 공동이용사업)	진안군 (진안경제지역 마을지방상수도 공급)	순창군 (장수벨트협의회 공동사무국 운영)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경유지)	해남군 ("남도광역추모공원"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마을공동체
과학기술 적용	X	X	X	O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원도군 (전남어촌지역시정군수 협의회 구성)	예산군 (신도시 공영자전거 "타이소" 운영)	함안군 (시군 경계지역, 마을문화센터 사업)	함안군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고성군 (행정협의회)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생활/편의	문화/관광	마을공동체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	○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고성군 (농특산물 직거래 정터 개설)	하동군 (한중 도시발전연맹 추진)	거창군 (세계습경기 허브도시 조성사업)	서울강남구 (인터넷 수능방송(강남인강) 협약)	김해시 (인도기념공원 조성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교육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	X
구분	인천광역시동구 (경인선 역사문화자산 네트워크 조성)	울산광역시북구 (상수도 보급 문제 해결)	대전광역시 (공동발전협의회 운영)	경기 안양시 (인전구가 서비스 햄 7개시 통합운영)	경기도 (경기도 지식 사이버 검정고시 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마을공동체	행정관리	안전/치안	교육
과학기술 적용	X	X	X	○	○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	○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	○	X

구분	경기도(아린이집 지도점검을 컨설팅으로 전환)	경기도(경기만 예코뮤지엄 조성사업)	경기도(지역공동체 활성화 '경기육아나눔터 운영')	경상북도(청년고짜방 설치 사업)	정선군(산수도시설물 공동이용)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O	X	X	X	X
구분	울산광역시 (양산시 하수 울산시 처리 협업체계)	전라남도 (통합사무소 설치·운영)	경기도 (지역회배 31개 읍 시·군 본격 발행)	화성시 (6개 통합 장사시설 설치)	고양시 (고양·파주시범원 승격 추진)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마을공동체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고양시 (경기북부 3개 시 현안공유 회의)	공주시 (미래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강화)	충청북도 (사전컨설팅 제도들 활용한 적극행정)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광역도시계획 공동수립)	울산광역시 (상생협의회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행정관리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과산군, 중평군 (광역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운영)	충장남도 (자살예방대책 협업과제 발굴 추진)	경기도, 기평군 (관광특구 공동 추진)	화천군 (인접 시·군간 경계 일원화 추진)	과산군 (청소년 도농문화 교류)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교육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과산군 (농특수산물유통활성화 협약체결)	서천군, 군산시 (동백대교 자질예방)	완주군 (테마버스 운영)	고령군 (우호교류협약)	산청군 (성생발전을 위한 업무협약)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문화/관광	문화/관광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통영시 (상생교류 협약 체결)	서울서대문구 (소소한 길기)	서울송파구 (업무협약(MOU) 추진계획)	안성시 (one-stop 통합복지시스템)	과천시 (one-stop 통합복지시스템)
주체 유형	지자체-지자체	지자체-지자체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문화/관광	사회복지	사회복지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O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	X	X

구분	파주시 (파주출판도시 문화데크)	서울서초구 (홍단보도 앞 안전지킴이)	달성군 (장남강도서관)	의왕시 (전국최초 통합일터)	인천광역시 (지하도상가를 디자인)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안전/치안	교육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O	X	X	X
구분	성남시 (공익성 시민교육)	부산광역시 (민간기업업무프로세스 행정업무 적용)	영광군 (기뭉극복 한파 피해 민원접수 개선)	공주시 (부도난 아파트 임차인 보호)	장성군 (잔디폐기물(부산물)처리화 방안)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교육	행정관리	생활/편의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O	O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창원시 (사회 Infra 확장을 위한 행정콜라보)	대구광역시달서구 (벤테이 드림클 (Dream+Upcycle) 프로젝트)	부산광역시 동구 (부동산중개업소 기반 디자인 특허, 개선 운영)	서울성동구 (첼트리피케이션(동지 내몰림) 방지)	안양시 (사회안전 인프라 통합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X	X	X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인양시 (및총형 복지서비스 운영)	서울강동구 (길고양이 급식소 운영)	삼척시 (지출산 극복 상생협력)	경상북도 (IoT기반 지능형 소화전 개발)	광양시 (해살부터일자리지원단)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생활/편의	사회복지	안전/치안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	X	X	○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	X	○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김제시 (관제센터 특이차량 위치알림 시스템)	남원시 (교육 길등)	대구광역시 (지동화기술로 3차원 지도 구축)	동해시 (공영주차장 요금 스마트 시스템 구축)	부산광역시 (용두신공원, 랜드마크 관광지모)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교육	행정관리	행정관리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	X	○	○	○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	○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	X	○
구분	부산광역시 (간강기부재단 조성)	부산광역시 수영구 (낙후된 마을을 문화관광의 메카로)	상주시 (농산물우수관리(GAP) 확산)	서울시 (소방관 재능기부, 화상환자 지원)	수원시 (폐목재 재활용)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문화/관광	안전/치안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강원도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제공)	부산중구청 (함께 나누는 바다)	경기도 (동두천 재발전 프로젝트)	아산시 (파산은행 자산을 시민 문화공간으로)	김제시 (우리쌀, 축제, 농촌 살리기)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문화/관광	문화/관광	문화/관광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	X	X	X	○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X	X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서산시 (스마트기술 공동활용)	원주군 (공공안전의 가치 확산)	세종특별자치시 (화성포 대기범지시설 가능개산)	사천시 (S&K항공(주) 공장 증축)	광주광역시북구 (금융, 고용, 복지 원스톱 통합서비스)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과학기술 적용	○	X	○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	○	X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

구분	서울용산구 (공예문화 클로컬리즘)	서울중구 (역주보금자리사업)	태백시 (수거, 배달, 맞춤형 대형이물 빨래방)	부산광역시연제구 (도시형 농업 스마트 팜)	서울강동구 (아이스팩 재활용 수거 시스템 구축)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	X	X	○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	○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광주광역시 (청년 해외진출 지원)	청주시, 증평군 (청주-증평 광역연계 초정 클러스터)	서울 강서구 (고도제한-과도제한)	광주 서구 (상무금융시장 불법노점 해결)	광주 남구 (희민주택 리모델링 지원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교육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	X	△	○	○
구분	광주 북구 (주정차금지구역 운영)	충북 제천시 (영농폐기물(반사필름) 재활용체계)	경기 이천시 (남비해소, 「광역지원 화수시설」)	서울 성동구 (정조적 공익공간조성)	전북 군산시 (역사적 유산 보존 및 활용 도시재생)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X	X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	X	X	X	X
구분	부산 수영구 (수영성 문화마을 조성)	경기 부천시 (자율순환시범마을 운영)	부산 영도구 (지역복지 구현)	경북 구미시 (맞춤형 통합지원체계 구축)	강원 심천시 (미로정원 조성사업)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마을공동체
과학기술 적용	X	X	X	○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	X	X	○	X

구분	부산 서하구 (함께 걷는 마을길)	경기 용인시 (건강다리 프로젝트)	경기 파주시 (배교 「별난 도서관평장」 운영)	서울 서초구 (서초100인 모기보안관)	전라남도 (「100원 택시」 전서군 확대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사회복지	문화/관광	안전/치안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	○	X	X	○
구분	전남 장흥군 (직은 영화관 「정남진 시네마」 운영)	경기 포천시 (포천관광 세일즈)	경기 포천시 (원로곡 국산화연계 떡 수출산업)	경기 여주시 (강천섬 명소화, 영농조합 회생 전략)	대구 중구 (인전마을민들레)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문화/관광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X	X	X	○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X	X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	X	X	X
구분	경남 거제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전북 부안군 (군민디자인단 정책랩 운영)	충남 아산시 (행복한 경로당)	경북 영주시 (아름다운 사람들, 뽕농기 나누美시)	전남 순천시 (순천형 로컬푸드)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강원 삼척시 (중점과제 T/F팀, 공·복합 회의 활성화)	부산 사하구 (평생학습 공유공간)	경기 용인시 (365베이비프리카켓)	경기 용인시 (동네서점에서 도서 대출)	서울 서대문구 (즐거운 학교 만들기 프로젝트)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행정관리	교육	사회복지	교육	사회복지
과학기술 적용	X	X	X	O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서울 서대문구 (스마트톨레길 건강혁명 공공서비스)	경기 파주시 (따주사랑 POP 운동)	경기 파주시 (이르신 행복일타+ 상성시니어 택배)	대전광역시 (기업도우미 운영)	대전광역시 (주유소 안심배출함 설치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O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O	X	X	X	X
구분	전라남도 (시니어 택배 사업)	전라남도 (여수 수산시장 화재수습 퀵터워)	전남 목포시 (행복공동체 만들기)	전남 여주시 (여수 무지개 토크 콘서트)	전남 여주시 (온라인 정책네트워크 구축)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마을공동체	문화/관광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전남 여수시 (행복배달 IT서비스)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 환경·안전 모니터단 운영)	전남 화순군 (화순군 민원모니터요원 운영)	전남 정흥군 (‘아이비’ 교실) 운영)	서울 중구 (근대역사문화관광)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교육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서울 중구 (꼭방 주민 자립)	경기 안양시 (지하시설물 안전지킴이 운영)	경기도 (시내버스 정소년 요금환인 확대)	경기도 (미술 진흥 중장기 프로젝트)	울산 남구 (태화강 나뭇장터 운영)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안전/치안	사회복지	문화/관광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경기 오산시 (오산벚넛시민대학)	경기 광주시 (Q-Service)	경기 광주시 (인허가 등돌면허세 방문민원 Zero화)	경남 합천군 (양조장 걸림, 썰산업 극복)	전남 화순군 (문화가 있는 날- 시간여행 in 화순)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교육	행정관리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	○	○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	○	X	X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전북 전주시 (전주 청년소통공간 '비밀')	충북 제천시 (공동주택배합성수지구 열화수 자원화)	전남 순천시 (순천시청년센터 조성)	충남 부여군 (고등학교 등(하)교 택시·버스 운영)	경북 칠곡군 (우리 아파트 한마음 학습 공방)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교육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경기도 (민관협력 폐기물 재활용 마을)	경기 시흥시 (도일시장, 뒤살림 이야기)	경기 부천시 (자치·자립·자생 시흥청년커뮤니티)	경기 오산시 (보조금 없는 복지)	경기 남양주시 (청년 남양주시 기획(Plan))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마을공동체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교육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경기 시흥시 (폐정수장 암사(클링))	경기 안산시 (외국인10년 보육료 지원 사업 추진)	경기 파주시 (심폐소생술 체험자 등본 무료 발급)	경기 파주시 (폐교 「별난독서캠핑장」)	서울특별시 (서울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안전/치안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O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서울 관악구 (민관협력 '녹두.zip' 운영)	서울 마포구 (마포1번가)	서울 성동구 (“동지내몰림”, 상생협력)	서울 서대문구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	서울 서대문구 (노점 상인·청년·지역이 상생)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행정관리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O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O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서울 영등포구 (보이는 마을소화기)	경기 안산시 (동포인식개선 교육)	경남 남해군 (고교생 방과후 이간 교통 지원)	경기 양평군 (청소년·청년 이끔어가는 마을만들기)	충청남도 (소방행정 문제점 발굴개선)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교육	지역개발/환경	문화/관광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충남 천안시 (사랑의 가구 만들기)	경남 진주시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 케어시스템)	충북 보은군 (대추 풍년)	경북 포항시 (스마트 지진방재 시스템 구축)	인천 중구 (민생행정 추진)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교육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안전/치안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O	O	O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O	O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O	X	X

구분	부산 남구 (기업과 청년이 동반성장)	경기 성남시 (공의성 시민참여교육)	경기 안양시 (청년정책서포터즈)	서울 금천구 (청년이 자립, 일자리 창출 프로그램)	서울 서대문구 (합치세대문)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교육	행정관리	교육	행정관리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O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서울 성동구 (성동구 청년소셜벤처기업 육성 지원)	서울 송파구 (중개사무소에서 편리한 서비스 제공)	서울 영등포구 (여성안심 빅데이터 CPTED 플랫폼)	경기 파주시 (건강직장 만들기 사업)	서울 성동구 (성동안심상가)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안전/치안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O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O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O	X	O
구분	서울 동대문구 (청년취업 'All-In-One프로젝트')	강원 태백시 (수거 배달, 대형이불 발래방 운영)	대구광역시 (동대구역광장 야간 경관개신 협약)	울산광역시 (오·폐수 공동처리)	부산광역시수영구 (낙후된 마을을 문화관광의 메카로 엄)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교육	사회복지	생활/편의	지역개발/환경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O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O	O	X	X	X

구분	성남시 (IoT 기반 공유 전기차전거 도입)	동해시 (버스타미널 통합 운영)	청원시 (공공디자인 협업사업 추진)	충청북도 (신재생에너지 산학융합캠퍼스 건립)	서울은평구 (거주자우선주차장 주차 공유 확대)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생활/편의	생활/편의	지역개발/환경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과학기술 적용	○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X	X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	X	X	X	X
구분	서울강남구 (세계최대규모 이트경연대회 유치)	서울강남구 (아르스 AI 스피커 돌봄서비스)	서울특별시 (친환경 콘택싱보일러 확대 보급)	광주광역시 (혁신기술 개발 및 시제품 판로개척)	울산광역시 (전기 공유 자전거 시스템 도입)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기타	생활/편의
과학기술 적용	X	○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	X	X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강원도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전라북도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결핍률 제거)	전라남도 (섬지역 휴대전화 난징지역 해소)	경상남도 (ICT 연계 "스마트 복지사업" 추진)	제주특별자치도 ("초-정밀 버스 위치 정보 서비스")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안전/치안	기타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생활/편의
과학기술 적용	○	X	X	○	○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	X	X	○	○
주체 간 자원공유	○	○	○	○	○
지속가능성	X	X	X	X	○

구분	구리시 (결혼이민자 맞춤형 취업 지원 추진)	하남시 (혁신통합조직(H.I.T))	안성시 (안성~서울 직행버스 추진)	거제시 (1화용품 사용 줄이기)	가장군 (지역포츠와 농산물 마케팅을 한번에)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생활/편의	지역개발/환경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대구광역시달성군 (행복한 아이키움)	연천군 (구석기 축제)	철원군 (신품중 '고향칠버' 브랜드 육성)	보은군 (미음밀착형 민관통합복지서비스 제공)	곡성군 (국성토관 만들기)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사회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환경	사회복지	지역개발/환경
과학기술 적용	X	X	X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X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영양군 (행복택시 운행사업)	칠곡군 (新제조업의 미래 'Smart Factory,')	서울광진구 (스마트안심 돌레길 모바일시스템)	서울중랑구 (서울 최대 공영주차장 조성(1,008면))	부산서구 (친화도시 서구 프로젝트)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생활/편의	기타	생활/편의	생활/편의	안전/치안
과학기술 적용	X	X	O	X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X	O	X	X
주체 간 자원공유	O	O	O	O	O
지속가능성	X	X	X	X	X

구분	부신금정구 (북한문화공간, 금정북파크작은도서관)
주체 유형	지자체-민간
서비스 분야	문화/관광
과학기술 적용	X
과학기술 적용 가능성	X
주체 간 자원공유	O
지속가능성	X

* 2차 분석을 통해 주체 간 자원공유와 지속가능성이 나타난 73개 사례를 음영처리하였음